

한눈에 보는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일제침탈사 자료총서》는

일제의 한국 침탈과 식민지배 정책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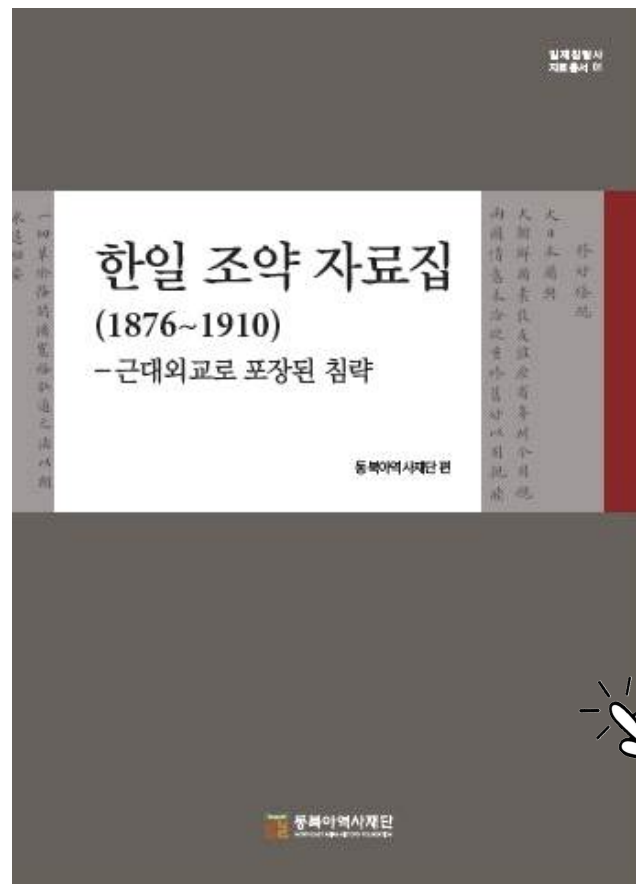
《일제침탈사 자료총서》는 조선총독부 문서, 일본 정부 및 군부 기록, 외교 문서, 통계 자료, 신문 기사와 보고서 등 다양한 사료의 번역과 함께 간략한 해제를 제공하여 자료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일부 세력이 식민지배의 책임과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현실에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학문적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재단은 한국 학계의 연구 역량을 모아 일제침탈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식민지배의 구체적 실상과 역사적 책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일제침탈사 자료총서》는 기존의 해석 중심 역사서와 달리, 당대 문서와 기록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수집·제시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식민지배의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는 학문적 토대가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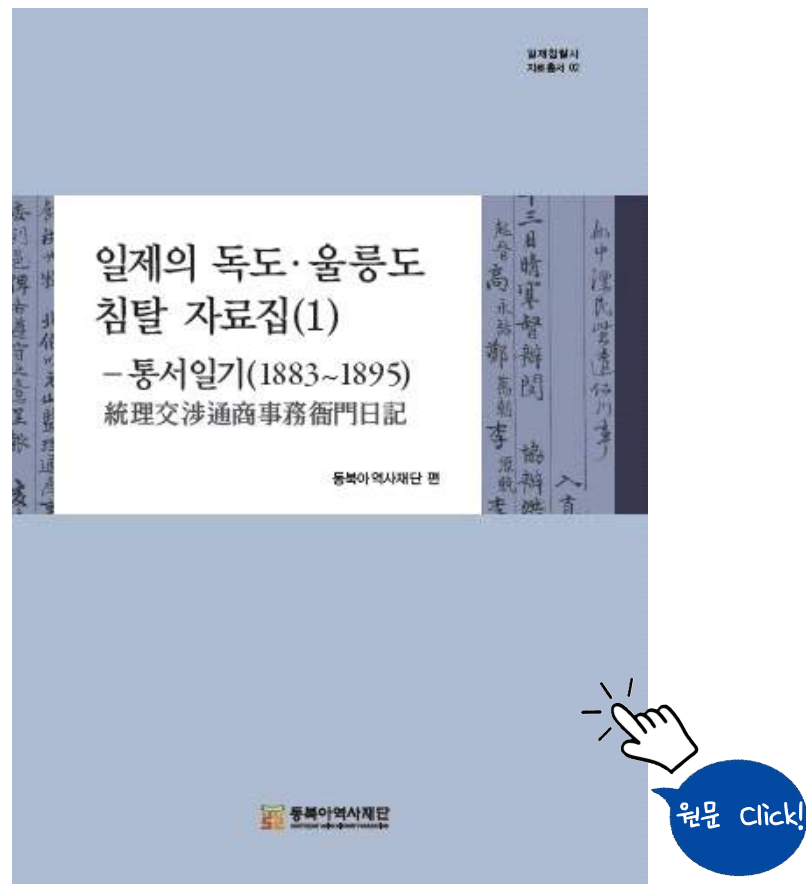


한일 조약 자료집(1876~1910)

근대외교로 포장된 침략

동북아역사재단 편 | 742쪽 | 35,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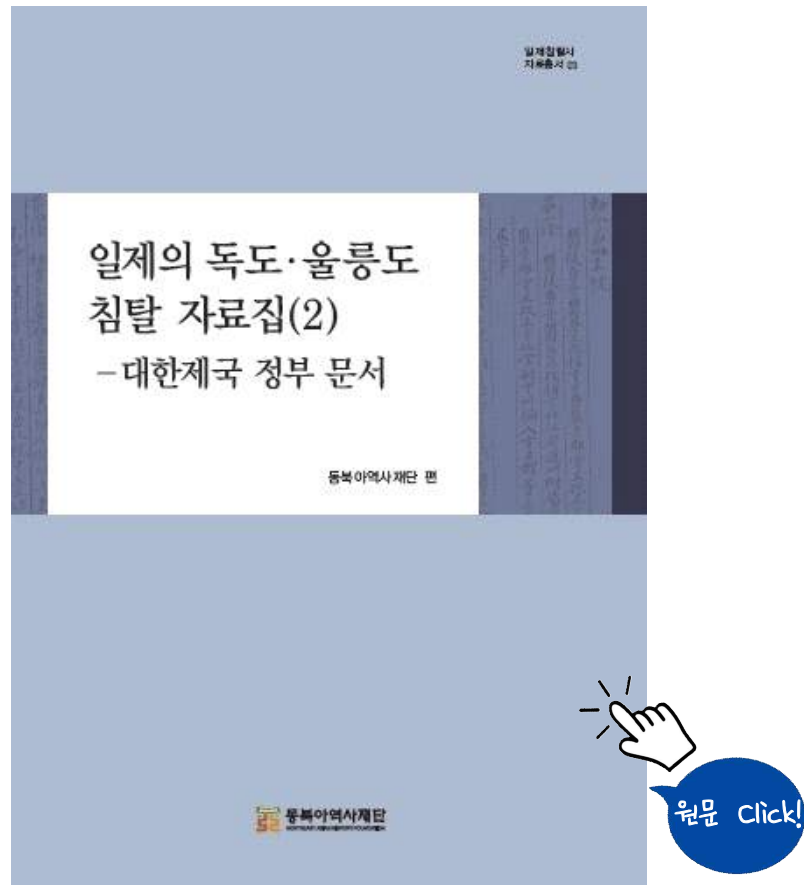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부터 1910년의 '강제병합조약'까지 한일 간에 체결된 조약들을 수록하고 있다. '조일수호조규'가 한일 양국의 '근대적 국제관계' 수립을 상징한다면, '강제병합조약'은 양국 관계가 '제국주의적 지배 관계'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이 자료집은 한일 간 '근대'의 출발점에서부터 외교 차원에서 전개된 '제국주의'의 양상을 조약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역사 이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역사 인식이 한일 관계를 화해로 이끌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1) 통서일기(1883~1895)

동북아역사재단 편 | 545쪽 | 33,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24-7

『통서일기』는 조선의 외교 관청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1883~1895년까지 작성한 일기로, 울릉도와 독도 관련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일본인들이 자원이 풍부한 울릉도를 지속적으로 침범했다는 사실, 울릉도 목재의 상품성이 높아 조선 정부가 영국과 미국 상인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려 했다는 사실, 울릉도 문제와 관련해 조선 정부가 여러 국가를 상대로 국제법을 적용하며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 등을 시계열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은 당시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과 일본의 울릉도·독도 침탈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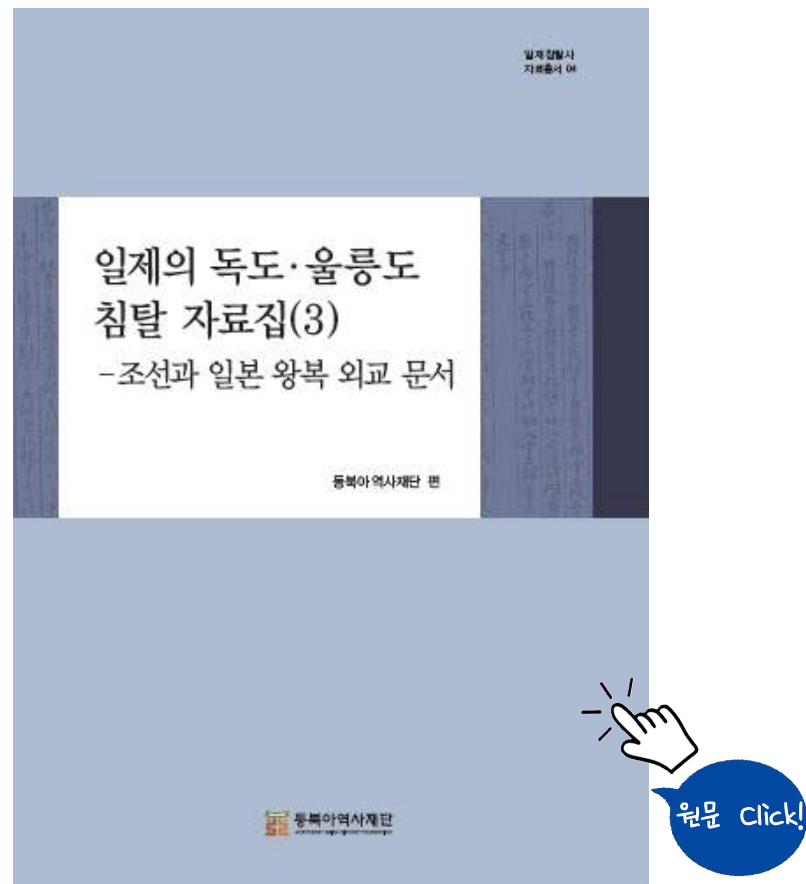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2)

대한제국 정부 문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 384쪽 | 28,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613-1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침탈에서 벗어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역사는 여전히 한일 관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 자료집은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신문 기사 가운데 독도·울릉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자료집에 실린 기사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를 어떻게 침탈했는지, 조선과 대한 제국이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동시대적 시점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신문 기사라는 당대의 기록을 통해 독도·울릉도 문제를 둘러싼 역사적 현실과 대응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와 울릉도 침탈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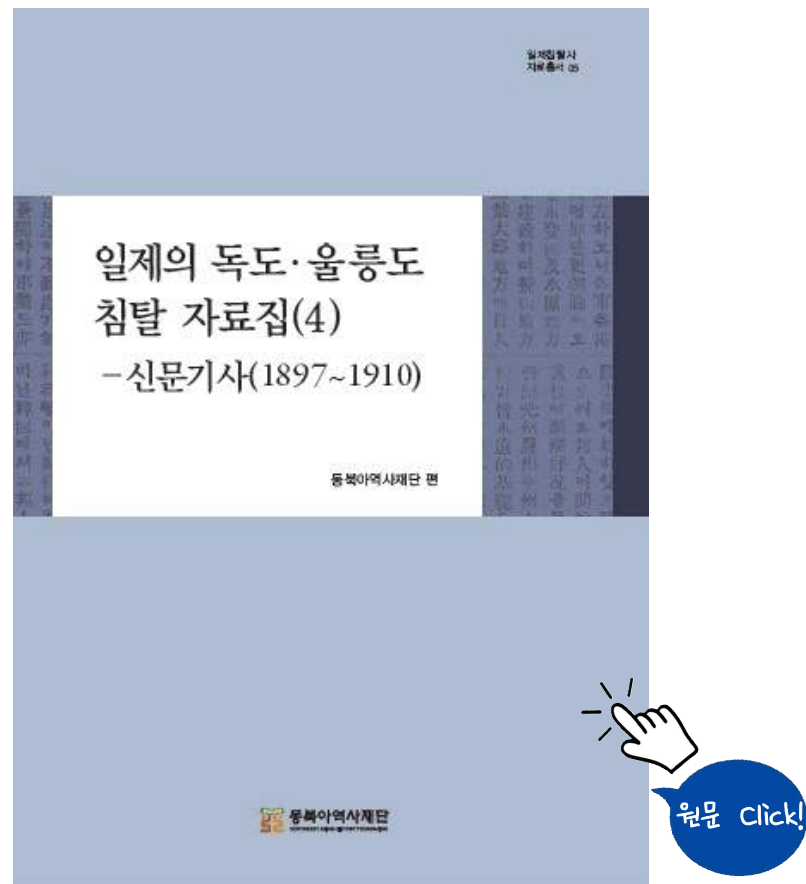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3)

조선과 일본 왕복 외교 문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 462쪽 | 25,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78-7

이 자료집은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 시리즈 중 마지막 책으로, 1960~1970년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간행한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 일안(日案)』에 수록된 울릉도·독도 관련 외교 문서를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다. 『일안』 수록 문서를 통해 근대 시기 울릉도·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발생한 현안에 대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일본이 울릉도·독도 지역을 어떻게 침탈해 나갔는지, 조선 측의 대응 논리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료집은 외교 문서를 통해 당시의 교섭 과정과 각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를 통해 독도·울릉도 문제를 둘러싼 근대 한일 외교사의 흐름과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실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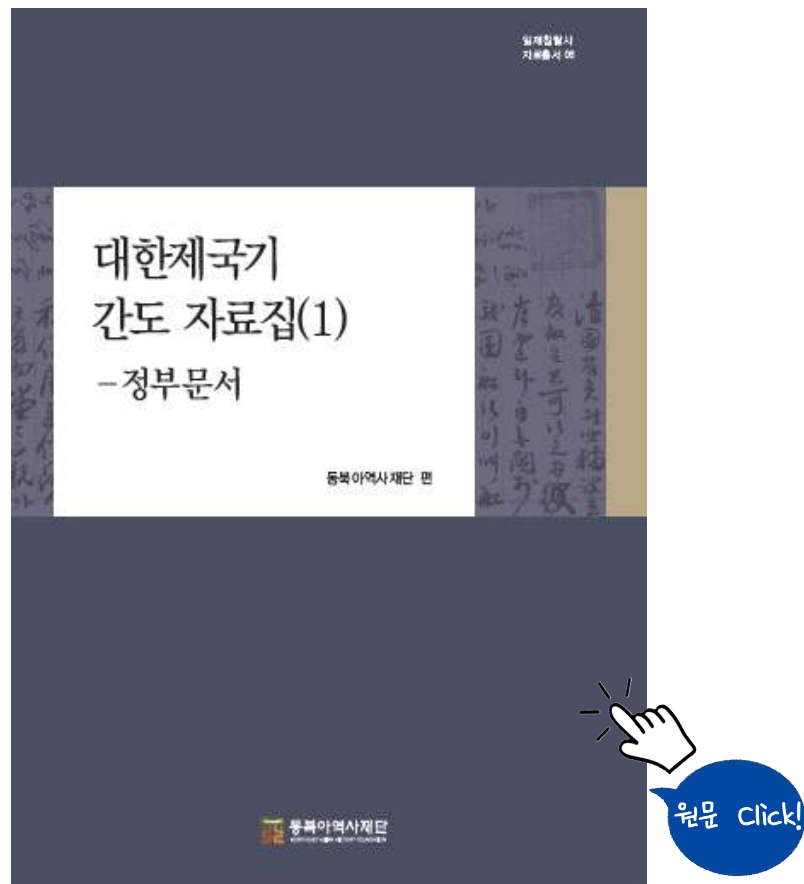


일제의 독도·울릉도 침탈 자료집(4)

신문 기사(1897~1910)

동북아역사재단 편 | 364쪽 | 32,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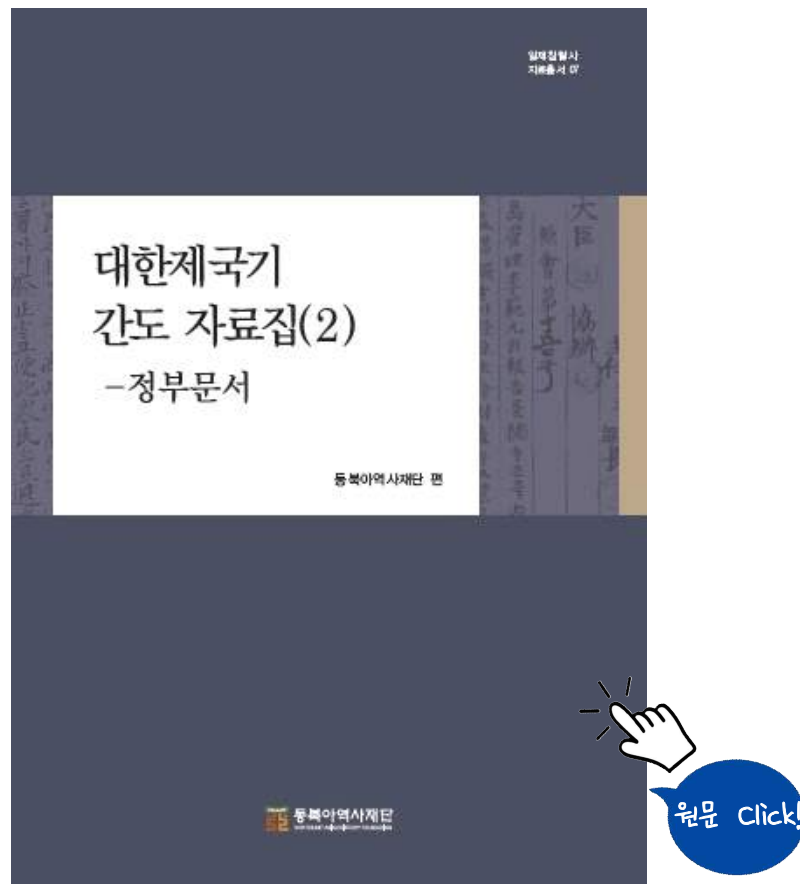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침탈과 독도 영토 주권을 둘러싼 역사 인식은 여전히 한일 관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자료집은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신문 기사 가운데 독도와 울릉도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 일본의 침탈에 맞서 조선과 대한제국이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대응도 함께 실려볼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인 기록들이지만, 당시 언론에 담긴 생생한 증언을 통해 일본의 독도·울릉도 침탈 과정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동시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제국기 간도 자료집(1) 정부문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 570쪽 | 34,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36-0

이 자료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간도 관련 공문서 가운데 주요 자료를 선별하여 번역·수록한 것이다. 특히 규장각 소장 자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함경남북도래거안』과 『평안남북도래거안』을 중심으로, 압록강 대안의 서간도와 두만강 대안의 북간도 지역에서 전개된 다양한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자료집은 간도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기초 자료로서,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근대 동북아 국경사와 한중 관계사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나아가 간도 지역을 둘러싼 행정, 외교, 이주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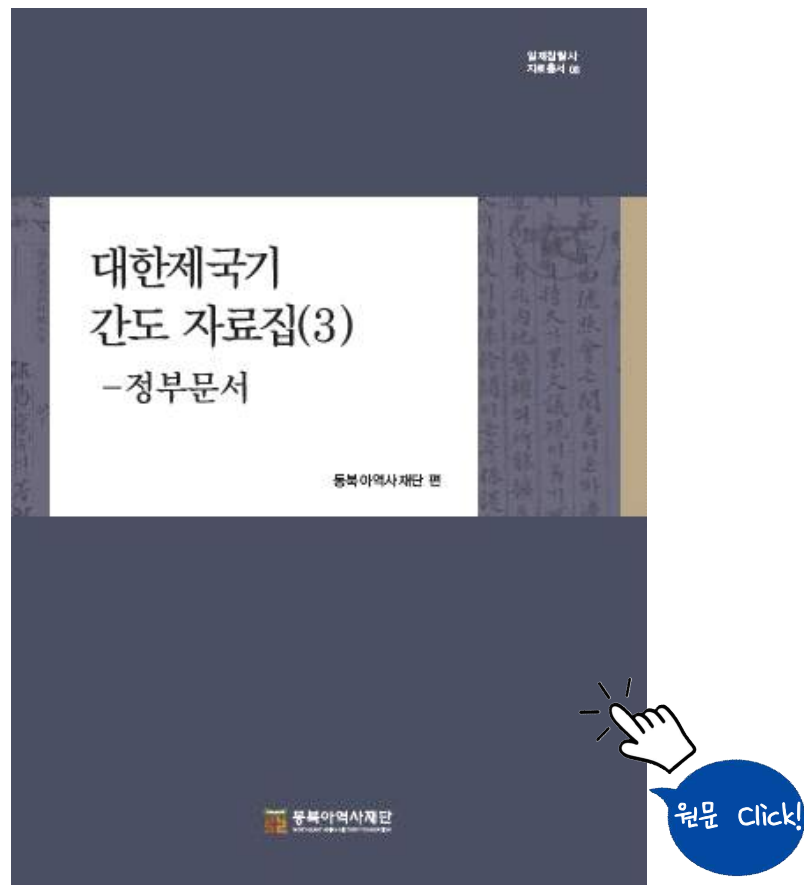


대한제국기 간도 자료집(2)

정부문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 552쪽 | 34,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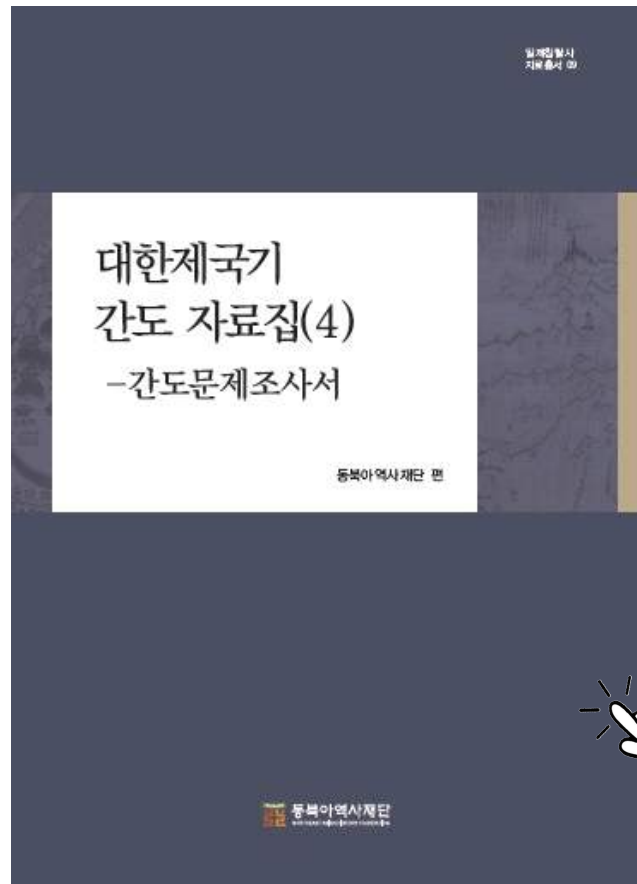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외부(外部)가 편찬한 공문서를 비롯해 의정부, 중추원, 탁지부 등 대한제국 주요 관서의 자료를 통해 당시 정부가 추진한 간도 정책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간도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생활상과 갈등, 국경 지역에서 겪었던 고난과 애환,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간도를 둘러싼 외교·행정 정책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함께 담아냄으로써, 대한제국기 간도문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근대 동북아 국경사와 한인 이주사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대한제국기 간도 자료집(3) 정부문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 596쪽 | 35,000원 | 2023년 | ISBN 978-89-6187-9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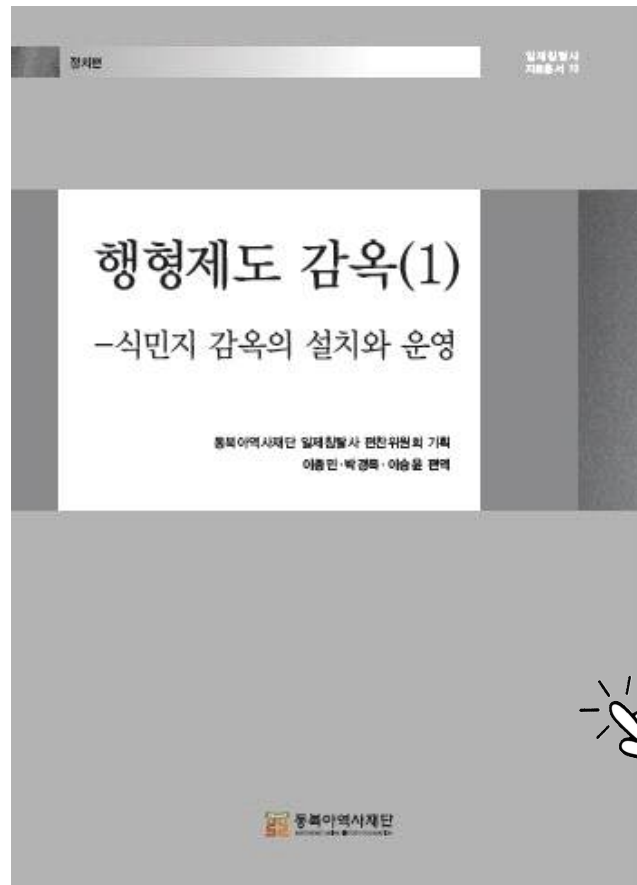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앞선 연구에 이어 대한제국 의정부, 탁지부, 외부의 미검토 사료를 대상으로 간도 관련 기사를 수집·번역하고 해제를 더했다. ‘간도’라는 공간에서 한인과 청인은 서로 혼재한 채 함께 살아가며 교류했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했다. 간도문제는 한중 간의 중요한 교섭 사안이었으며, 대한제국 시기 양국 민간과 정부의 간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정부 각처의 문건은 당시 간도를 둘러싼 양국의 상황과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간도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대중이 간도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대한제국기 간도 자료집(4) 간도문제조사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 360쪽 | 3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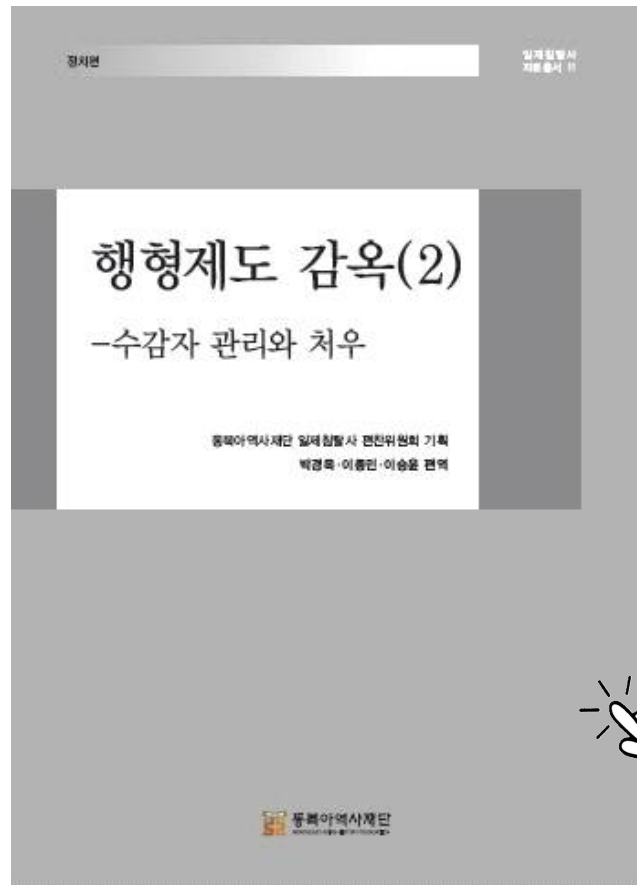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1907년에 작성된 『간도문제조사서』와 1909년의 「간도문제사견」을 번역·수록한 것이다. 두 문서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고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간도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당시 일본이 주목한 핵심 현안은 청과 조선 사이의 국경이 명확하게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특히 통감부의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문제는 일본의 대외정책과 식민지 지배 전략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자료집은 간도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의 시각과 논리를 원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한제국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간도 영유권 논쟁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행형제도 감옥(1) 식민지 감옥의 설치와 운영

이종민·박경목·이승윤 편역 | 870쪽 | 45,000원 | 2024년 | ISBN 978-89-6187-694-0

이 자료집은 근대 감옥과 행형제도의 도입 및 변화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실상을 살펴본다. 행형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집행하는 절차와 방식을 의미하며, 근대 감옥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적 공간이다. 조선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형벌제도와 감옥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독자적인 제도 정비 과정을 이어가지 못한 채 일본식 행형제도를 이식받았다. 이 자료집은 근대적 형벌제도의 형성과 변용 과정을 통해 식민지 권력이 조선 사회를 통제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침탈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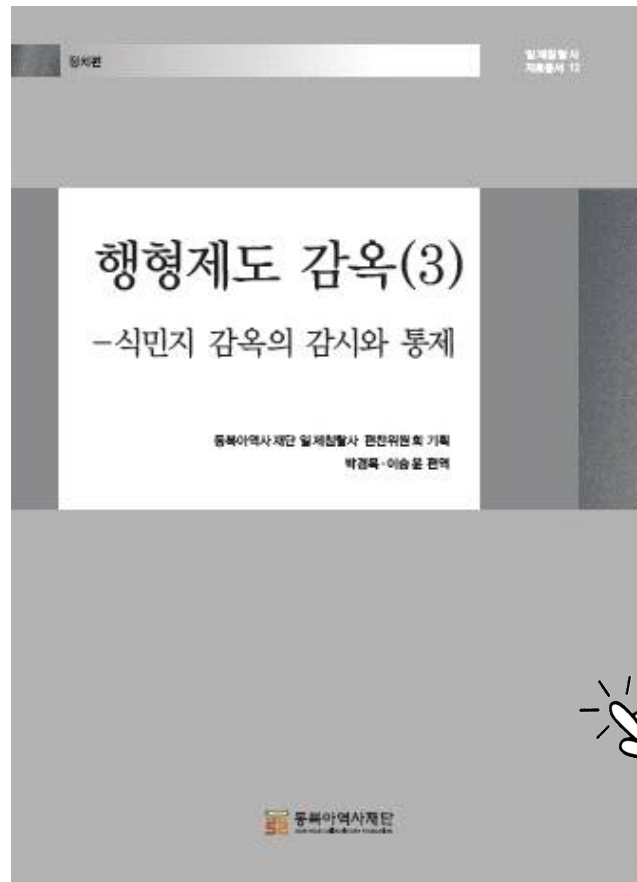


행형제도 감옥(2)

수감자 관리와 처우

이종민 · 박경목 · 이승윤 편역 | 800쪽 | 45,000원 | 2024년 | ISBN 978-89-6187-7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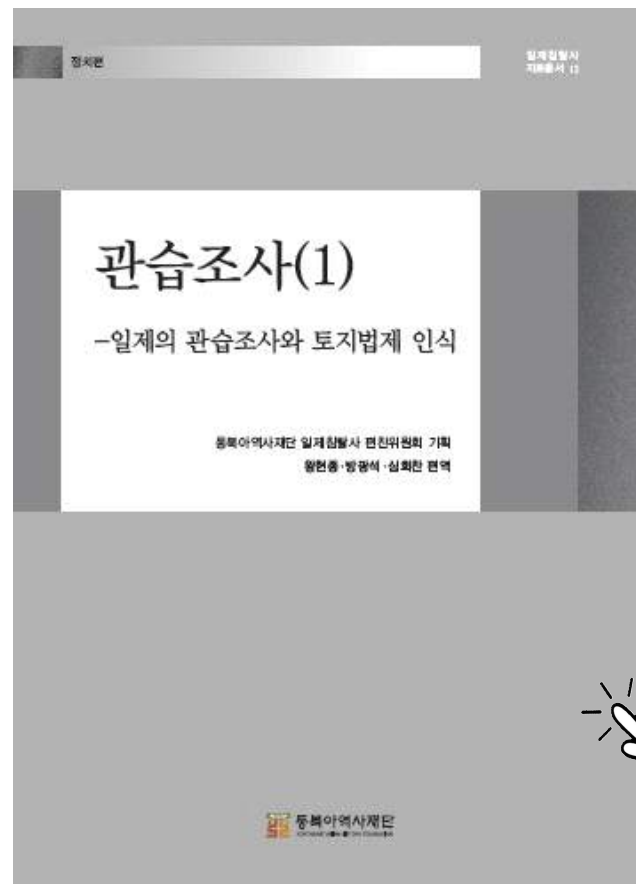
이 자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비록 식민지 지배자의 시각에서 작성된 기록들이지만, 그 속에는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감자들의 생활과 처우, 감옥 운영의 실제 모습 등을 통해 식민지 권력이 작동한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일제강점기 행형제도의 실체를 구체적인 사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감옥과 행형제도가 단순한 형벌 집행의 장치를 넘어 식민지 사회를 통제하는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이해하게 해 준다. 이 자료집은 식민지 지배의 어두운 단면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행형제도 감옥(3) 식민지 감옥의 감시와 통제

박경목·이승윤 편역 | 642쪽 | 38,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73-7

이 책은 통감부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제정·운영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운동 탄압 법령을 면밀히 분석하고, 식민 통치의 핵심 기제로 작동한 사상 사법체제의 실체를 추적한다. 또한 사상사건(思想事件)을 담당한 조선총독부 주요 경찰, 검사, 판사 등의 경력과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법 집행의 구체적 양상을 드러낸다. 아울러 식민지 조선 통제 법령의 제정 과정과 적용상의 차이를 일본과 비교·분석하여, 기존의 일국적 연구 시야를 확장하였다. 이 책은 식민지 법제와 사상 통제의 역사를 탐구하는 연구자와 독자들이 일제강점기의 권력 구조와 통치 메커니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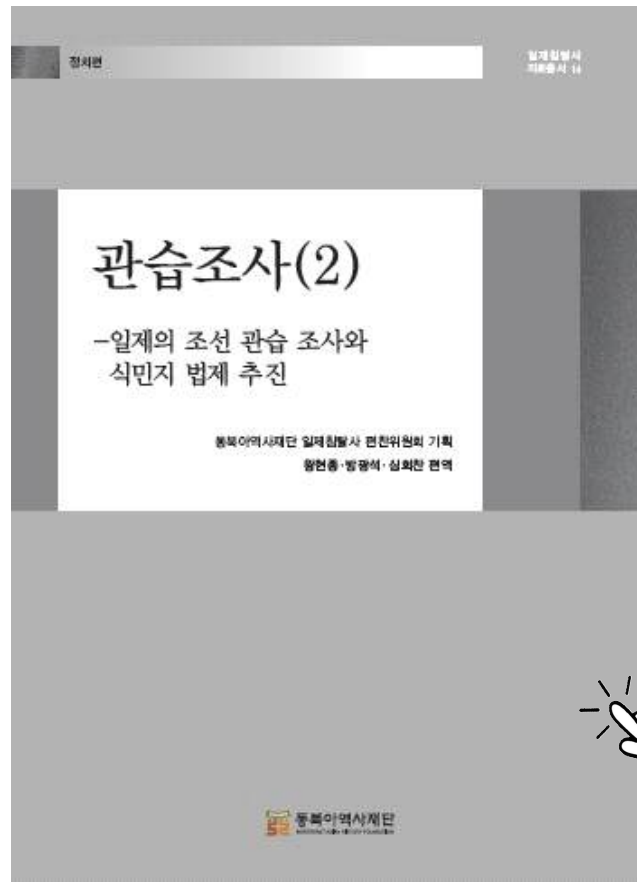


관습조사(1)

일제의 관습조사와 토지법제 인식

왕현중 · 방광석 · 심희찬 편역 | 618쪽 | 36,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86-5

이 자료집은 ‘일제의 조선 관습조사와 식민지 법제 창출’이라는 주제 아래, 원본 자료를 통해 당시 조선 사회의 실상을 추적하고 일제 식민침탈사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부동산법조사회에서 수행한 조선 관습조사(1906. 7.~1907. 12.)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 식민 통치 초기 법제 형성의 구체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의 침략 의도와 식민지 법제화 추진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식민지 법제 형성과 침략 과정에 대한 새로운 역사 인식을 제공하고, 근대 동아시아 식민지 지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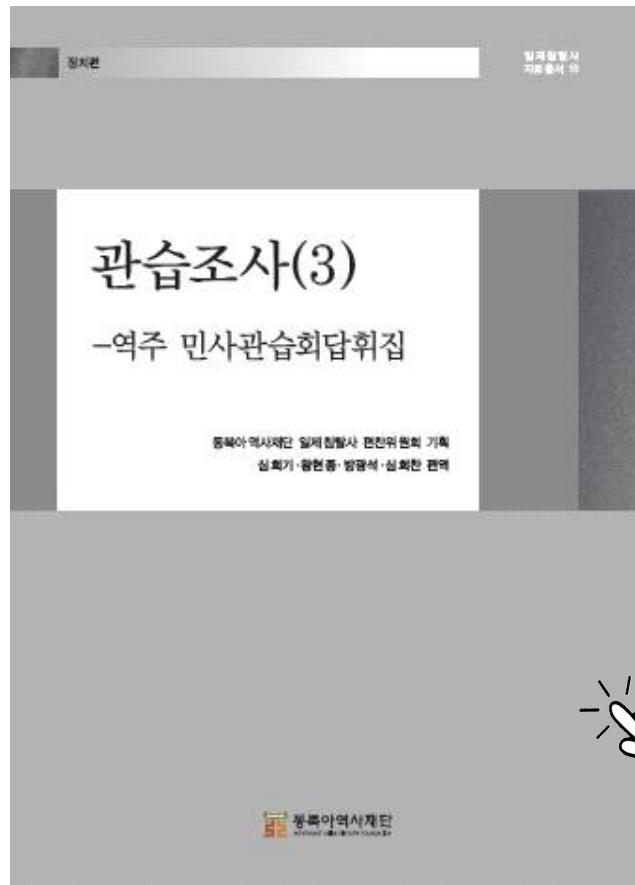


관습조사(2)

일제의 조선 관습 조사와 식민지 법제 추진

왕현중 · 방광석 · 심희찬 편역 | 828쪽 | 47,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80-0

이 책은 광복 직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의 송환 과정을 통해 식민지 지배의 해체와 탈식민 질서의 형성 과정을 조명한다. 총독부 관료, 일본군, 민간 일본인의 귀환이 지닌 의미를 각각 살펴보면, 일본인 송환이 단순한 인적 이동이 아니라 식민 통치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 질서의 출현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음을 밝힌다. 또한 해방기 송환 과정을 식민 권력의 잔존과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교차한 복합적 국면으로 분석하여, 동아시아 탈식민화의 불완전성과 그 역사적 유산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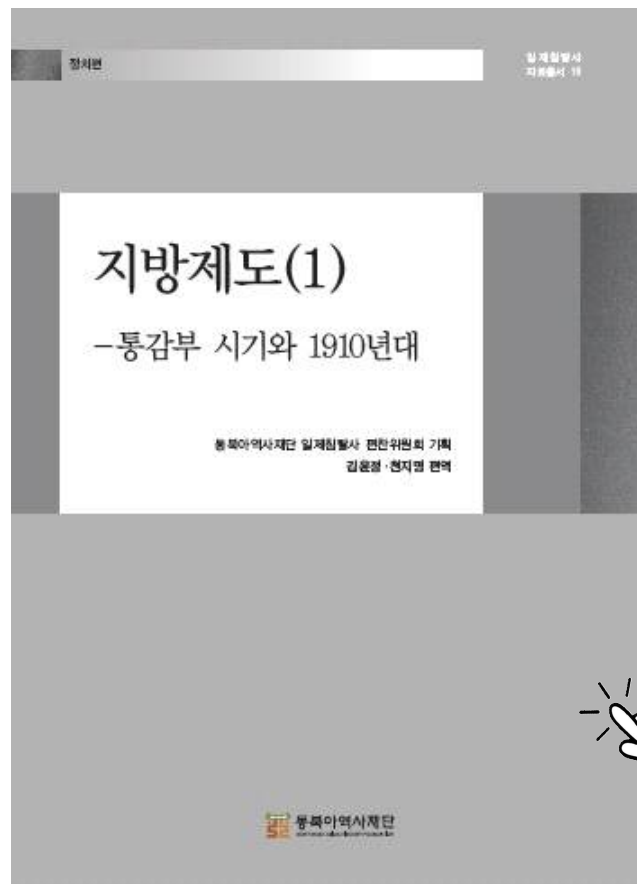
관습조사(3)

역주 민사관습회답휘집

심희기 · 왕현중 · 방광석 · 심희찬 편역

738쪽 | 4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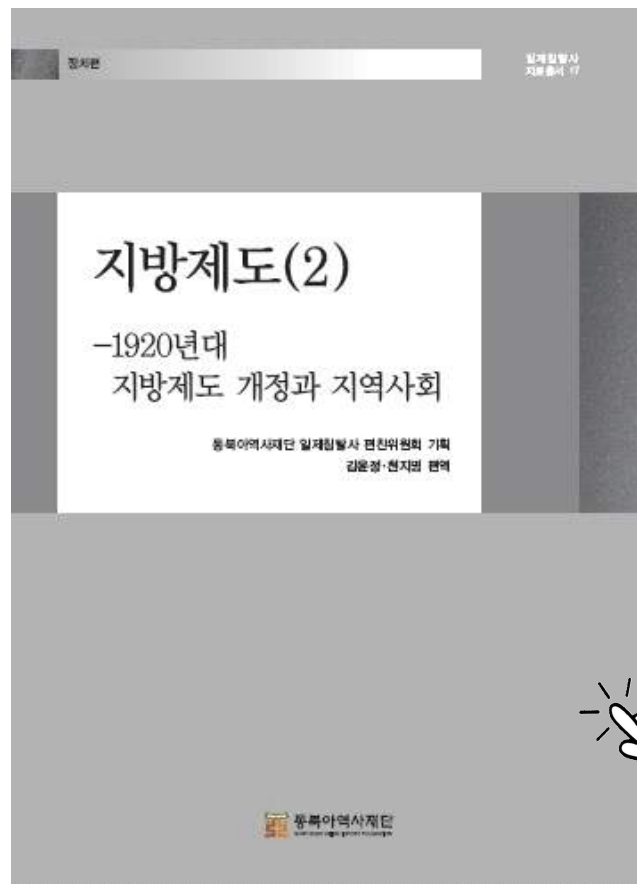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추진한 구관조사 사업과 민사관습 연구를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 법제 형성과 통치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조선반도사』, 『조선인명회고』, 『조선지리지』 편찬을 비롯해 조선 사회사정 조사와 부락 조사 등으로 확대된 중추원의 사업은 식민 통치의 학문적·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자료집은 일제 중추원의 관습조사와 식민지 법제의 실재를 분석하여 1910년 강제병합 이후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통치 전 기간의 법적·제도적 지배 구조를 포괄적으로 조명한다. 나아가 관습조사를 매개로 작동한 식민지 지배의 원리를 밝히고, 일제 식민 통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한다.



지방제도(1) 통감부 시기와 1910년대

김윤정·천지명 편역 | 640쪽 | 37,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87-9

이 자료집은 일제의 지방 지배 체제와 식민지 지역사회의 재편 과정을 지방제도의 변천을 통해 살펴본다. 1906년 지방 행정구역 및 지방관 제도 개편을 시작으로, 1910년 조선총독부 지방관 관제, 1914년 부제 실시, 1917년 면제 공포 등 1920년 지방제도 개정 이전까지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가 지방행정 체계를 정비하며 중앙 권력을 지역사회에 침투시킨 과정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제도의 변화는 식민지 권력이 지역 단위까지 확장되고 일상적 행정 지배로 정착되어 간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지방제도의 성격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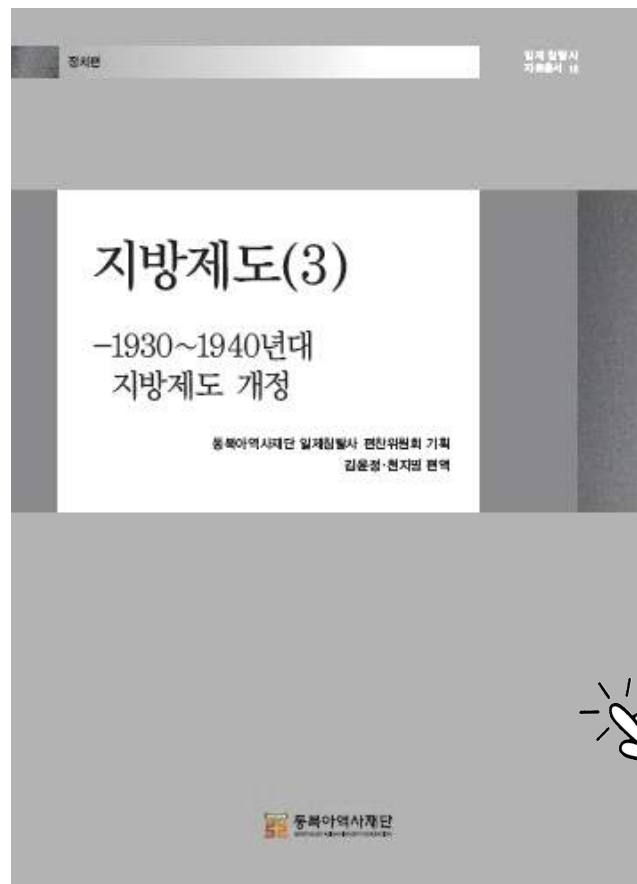


지방제도(2)

1920년대 지방제도 개정과 지역사회

김윤정·천지명 편역 | 616쪽 | 35,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3-5

이 책은 1920년 지방제도 개정과 그 운용을 둘러싼 일제의 계획과 대내외의 반응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엮은 것이다. 일제의 ‘자문기관’ 설치 의도가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참정권과 자치를 둘러싼 논의, 지역에서의 지방제도 운용 양상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방제도 개정이 단순한 행정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식민지 지배를 지역사회에 제도적으로 관철하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지방제도의 변천과 흐름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아울러 현 지방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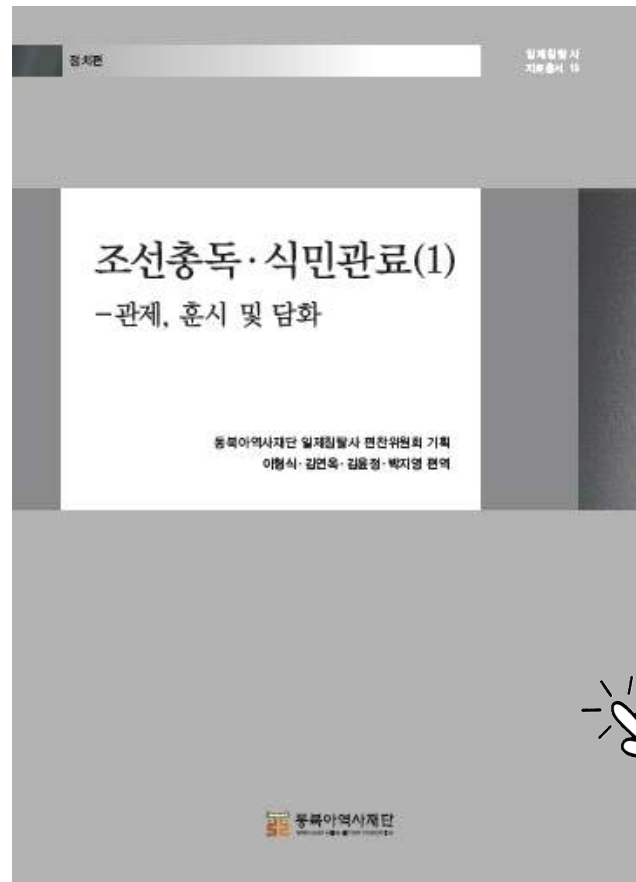


지방제도(3)

1930~1940년대 지방제도 개정

김윤정·천지명 편역 | 692쪽 | 40,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60-4

이 책은 1930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도평의회가 도회로 개편되고, 1931년부터 부회와 읍회가 자문 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전환된 이후의 제도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중일전쟁 이후 사회 전반에 통제정책이 시행되고, 1943년부터 선거가 ‘추천 선거’라는 변형된 형태로 바뀌는 시기까지의 지방제도 운영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조선총독부의 행정과 통치가 지역 사회 말단까지 침투해 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제도의 개편이 자치의 확대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를 효율화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기능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지방제도의 근본적 모순과 한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조선 지방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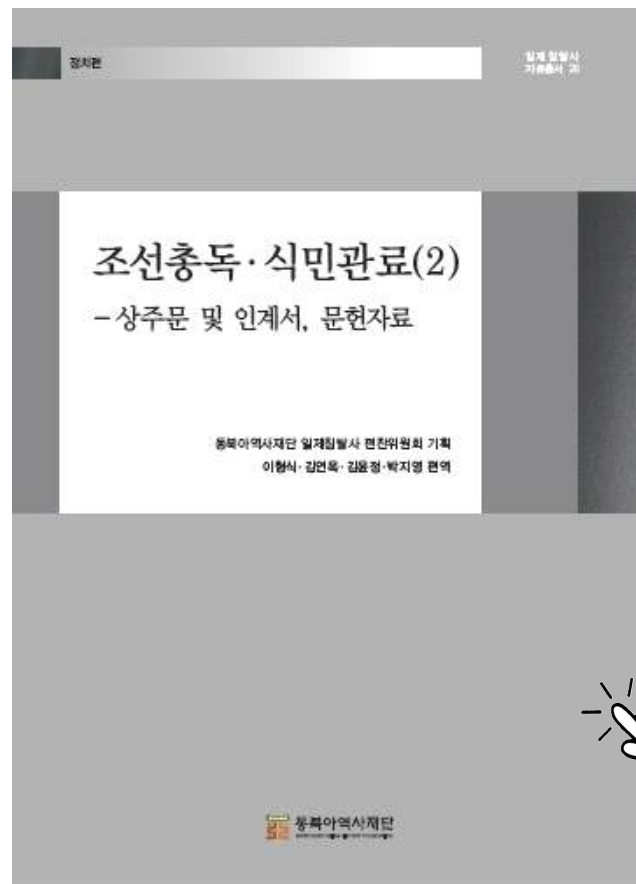
조선총독·식민관료(1)

관제, 훈시 및 담화

이형식 · 김연옥 · 김윤정 · 박지영 편역

520쪽 | 35,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64-2

이 자료집은 조선총독부 관제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개정 과정에 작동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를 함께 분석한다. 관제는 총독부 기안에서 법제국 심의, 각의 결정, 추밀원 심의, 천황 재가에 이르는 복합적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이 자료집은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적한다. 아울러 역대 조선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 담화 등을 함께 번역·수록하여 각 시기의 시정방침과 통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정의 배경과 통치 방침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의 구조와 통치 운영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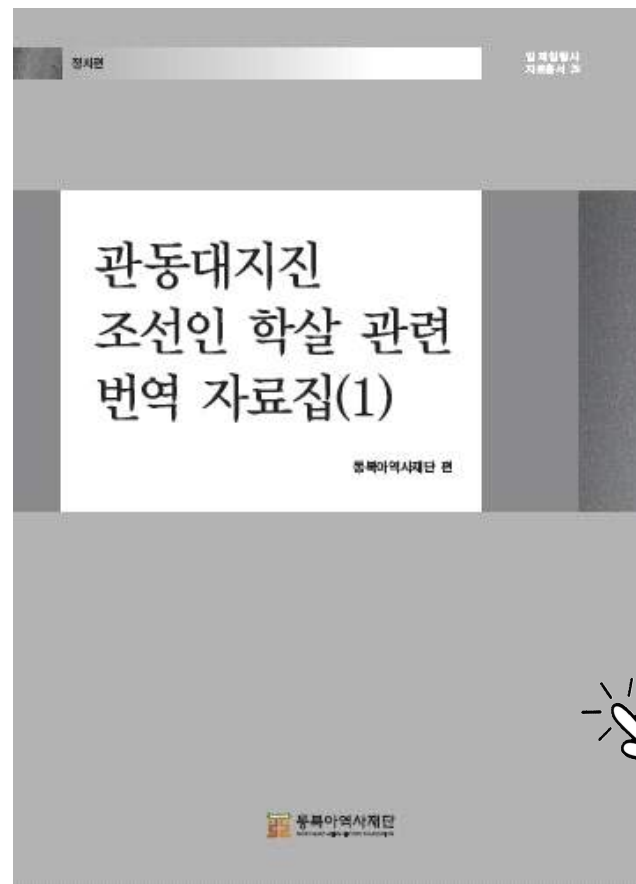
조선총독·식민관료(2)

상주문 및 인계서, 문헌자료

이형식 · 김연옥 · 김윤정 · 박지영 편역

556쪽 | 35,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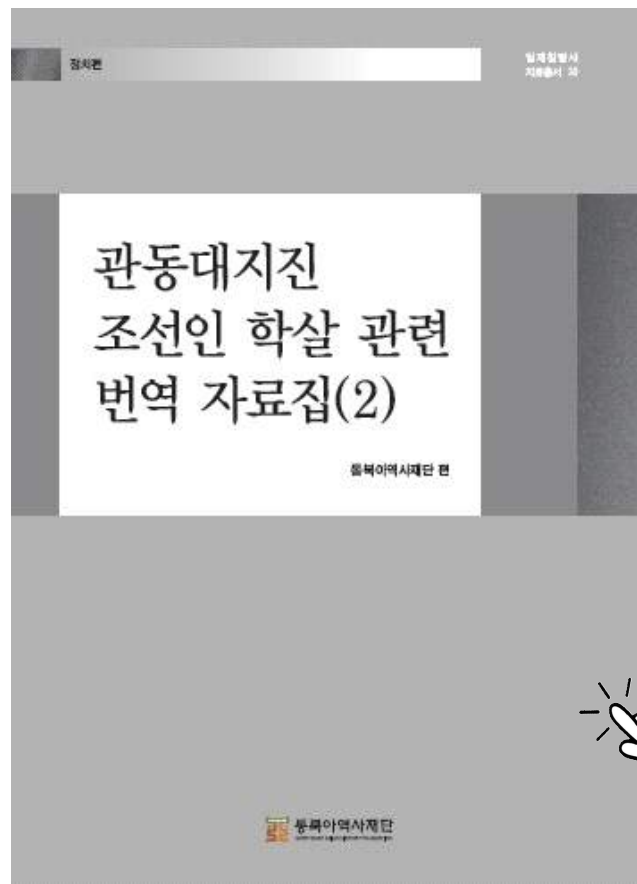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조선총독부 총독이 천황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한 통치 보고, 곧 상주와 내주 관련 사료를 번역·수록한 것으로, 식민지 통치의 최고 권력 구조와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 자료를 담고 있다. 공개가 제한되어 있던 접견 기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문서관 자료와 총독 개인 문서, 관계 문서를 종합적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와 일본제국 권력 중추 사이의 보고·지시 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조선총독부의 통치 보고 체계를 실증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일제 식민지 지배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번역 자료집(1)

동북아역사재단 편 | 472쪽 | 3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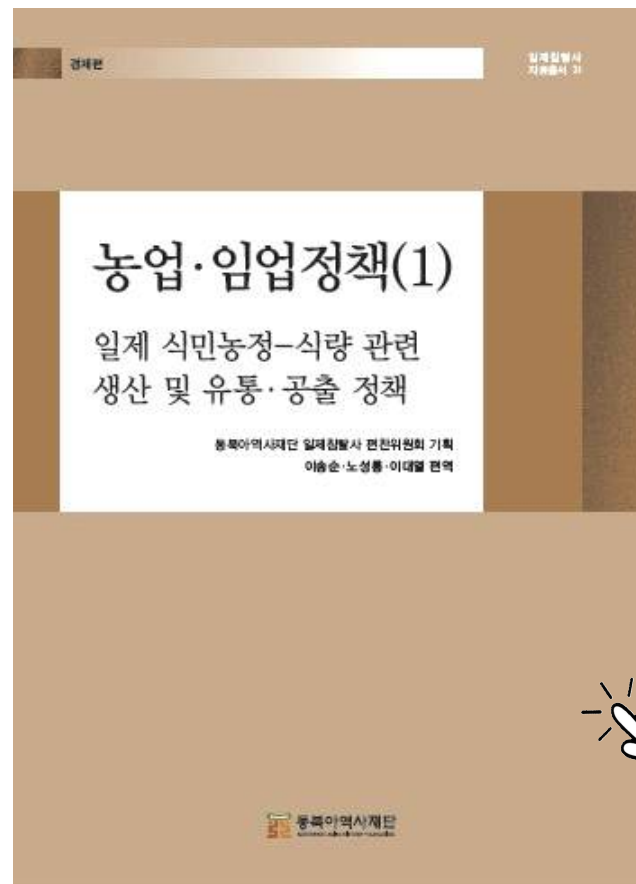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학살 당시의 신문 보도와 유언비어 관련 자료, 자경단 활동 기록, 계엄령 관련 법령, 정부 및 행정기관의 보고서 등 다양한 사료를 수록하여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전개 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발생과 확산, 국가 권력과 민간 조직의 대응 양상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주요 기관에 소장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살의 원인과 책임 문제, 이후 기억과 기록의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적 기억을 확산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번역 자료집(2)

동북아역사재단 편 | 506쪽 | 30,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66-6

이 자료집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자료를 선별하여 수록한 두 번째 번역 자료집이다. 국문 언론 보도 자료를 비롯해 재판 관련 자료와 증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고,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기억의 계승과 책임」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를 통해 학살사건의 전개 과정과 피해 증언, 사법적 대응의 양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일본어 자료의 번역과 해제를 통해 연구자와 교육자가 사건의 핵심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건 은폐 속에서 일본어로 작성된 제한적인 자료들을 번역하여 한국에서의 관련 연구 심화와 역사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자료집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고 남겨진 과제를 계승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농업·임업정책(1)

일제 식민농정-식량 관련 생산 및 유통·공출 정책

이송순 · 노성룡 · 이대열 편역 | 722쪽 | 42,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96-4

이 자료집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농정의 본질과 내용, 당대 자료에 나타난 관련 언설을 정리한다. 특히 일제 식민농정 가운데 생산력과 유통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식민 통치 기관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동시에 조선인 사회의 반응과 조선 농민들의 현실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식민농정의 이면을 보여준다. 신문·잡지 기사 등 당대 언론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식민농정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자료집은 일제 강점기 자료를 통해 식민농정의 실체와 그 속에 내재한 수탈 및 강제 동원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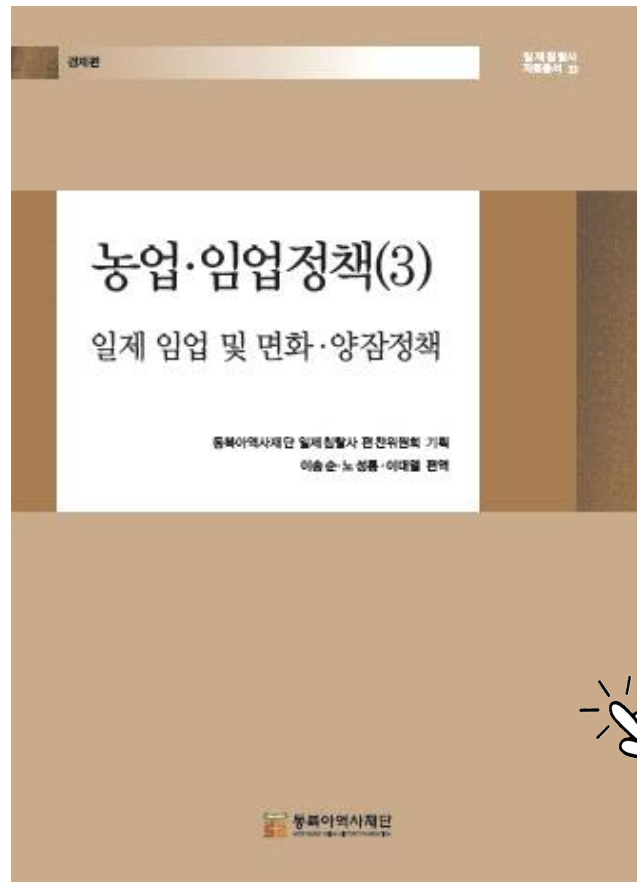
농업·임업정책(2)

일제 식민농정-토지소유 및 생산관계

이승순 · 노성룡 · 이대열 · 윤종우 편역

596쪽 | 35,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81-7

이 자료집은 1920년대 일제가 추진한 식민농정의 핵심인 토지소유권 제도의 확립 과정과 그로 인해 형성된 식민지 생산관계의 실상을 살펴본다. 일제의 농업정책은 근대적 토지소유 제도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소유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며 소작농민의 생존권과 최소한의 권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토지소유권의 제도화가 조선 농촌의 계층 구조와 소작 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 식민농정이 단순한 농업 개발 정책이 아니라 식민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장치였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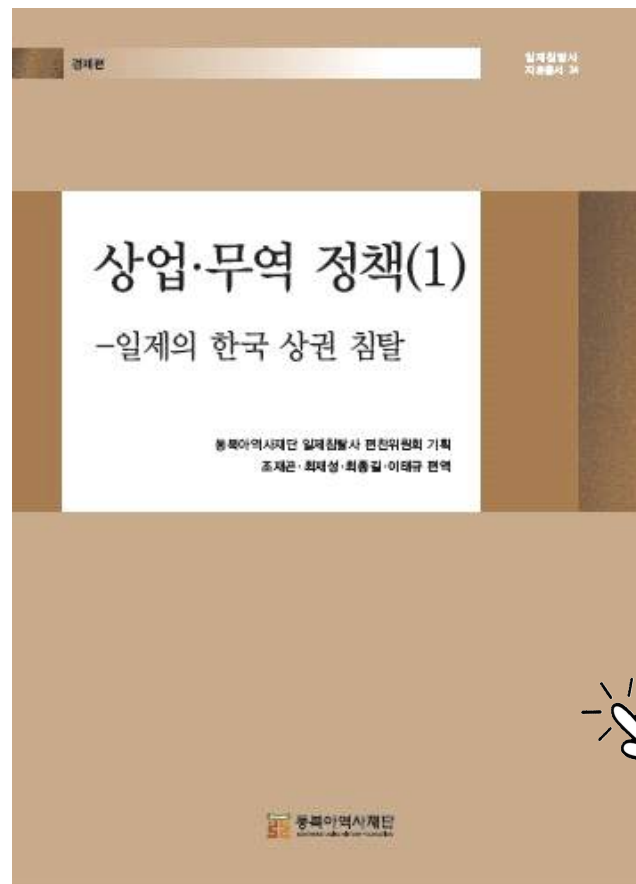


농업·임업정책(3)

일제 임업 및 면화·양잠정책

이송순 · 노성룡 · 이대열 편역 | 676쪽 | 32,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7-6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식민농정의 전개 양상을 조망하고, 임업정책과 면화·양잠 중심의 의류작물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산야와 농업 생산 기반은 일본 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재편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생산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식민 통치 기관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속에 드러난 정책 논리와 수탈 구조를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식민지 경제정책이 조선 민중의 삶과 노동,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경제사와 사회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초 자료이자 길잡이를 제공한다.



상업·무역 정책(1)

일제의 한국 상권 침탈

조재곤 · 최재성 · 최종길 · 이태규 편역

732쪽 | 4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74-9

일제강점기 조선은 일본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시장으로 기능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시혜론’을 수용한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시기 조선 경제를 ‘개벌’과 ‘근대화’의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 이러한 인식이 ‘반일 종족주의’ 등의 이름으로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일제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통치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 토대를 확립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상권 침탈의 과정은 식민지 경제 구조가 조선인의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한국 상권 침탈사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식민지 경제 지배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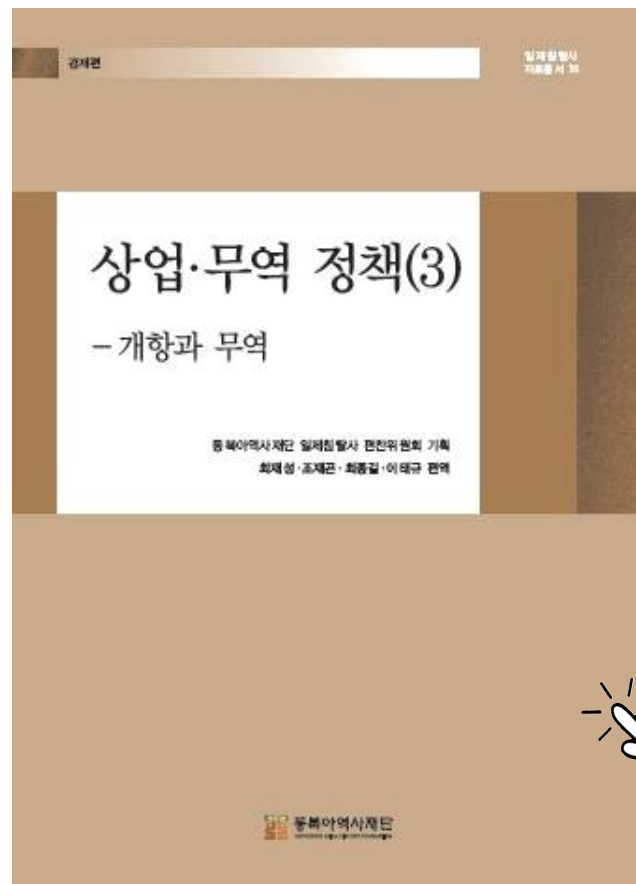


상업·무역 정책(2) 상공회의소

조재곤 · 최재성 · 최종길 · 이태규 편역

766쪽 | 4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4-2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상업·무역 정책 중 ‘상업회의소·상공회의소·상공경제회’와 관련된 ‘상공업 기구’ 분야를 번역한 것이다. 주로 한말부터 식민지 시기에 걸친 경제정책의 정립 과정과 상공업 관련 기구의 구성 및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일제의 침탈과 그로 인한 조선인의 피해를 중심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 사실을 정책 실행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상공업 기구가 식민지 경제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관련 법령과 상공업 기구의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일제의 경제적 침탈과 지배 구조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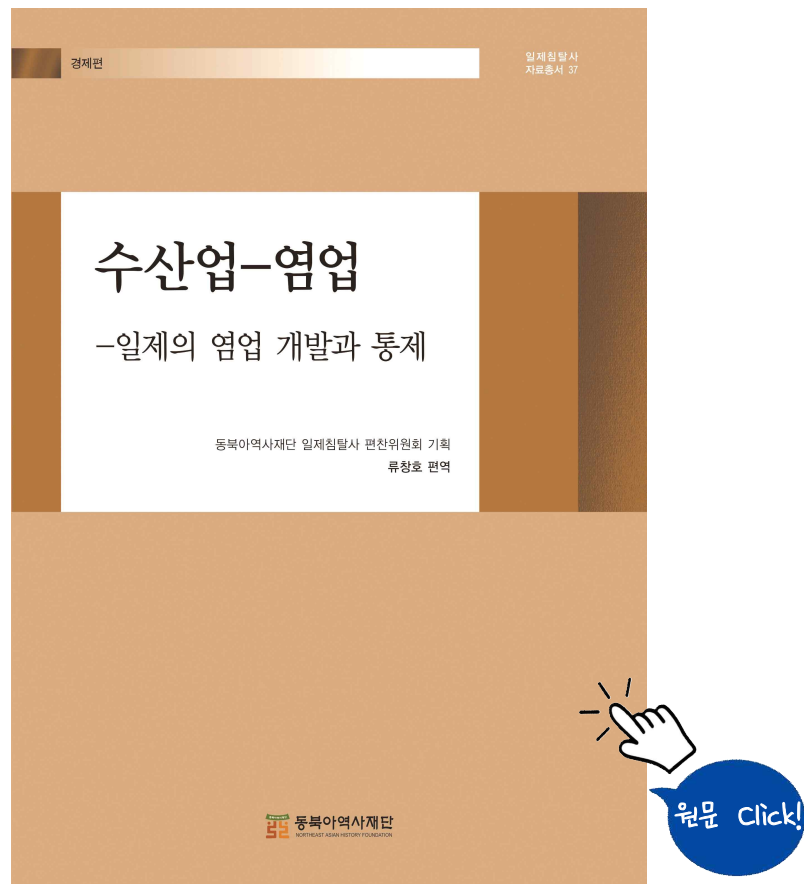
상업·무역 정책(3)

개항과 무역

최재성 · 조재곤 · 최종길 · 이태규 편역

718쪽 | 40,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59-8

이 자료집은 1876년 개항부터 1945년 광복까지 조선 근대 무역의 전개 과정을 일제의 무역 침탈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개항기부터 식민지기 말기까지를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무역 · 관세 · 개항장 및 무역항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이 일본제국의 경제에 편입되면서 농산물 수출과 공업 제품 수입 구조가 강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조선무역협회, 조선총독부, 상공 회의소 자료와 신문 기사 등을 함께 수록하여 식민지 무역의 실상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무역 구조가 일본 중심의 제국 경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 식민지개발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제의 무역 부문 경제 침탈사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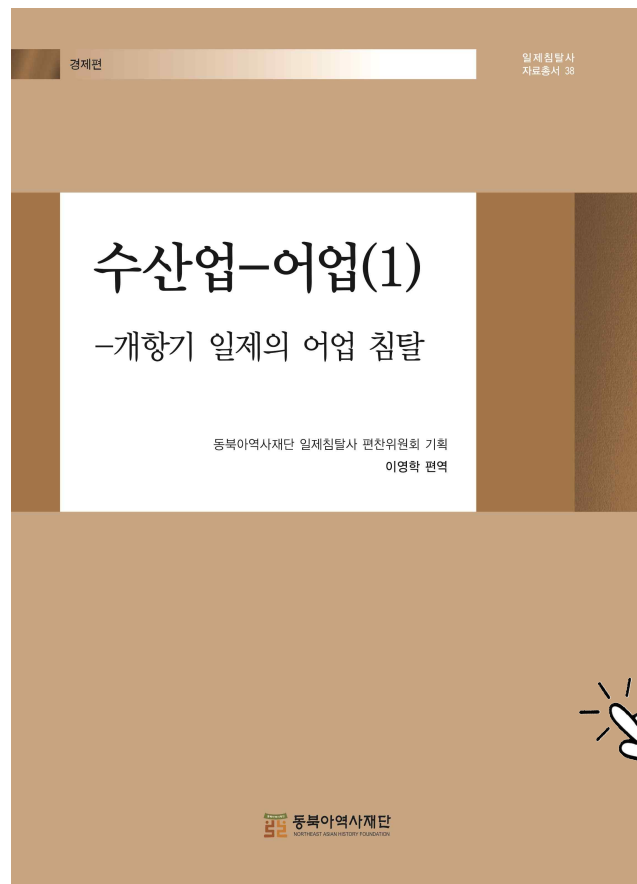


수산업-염업

일제의 염업 개발과 통제

류창호 편역 | 770쪽 | 42,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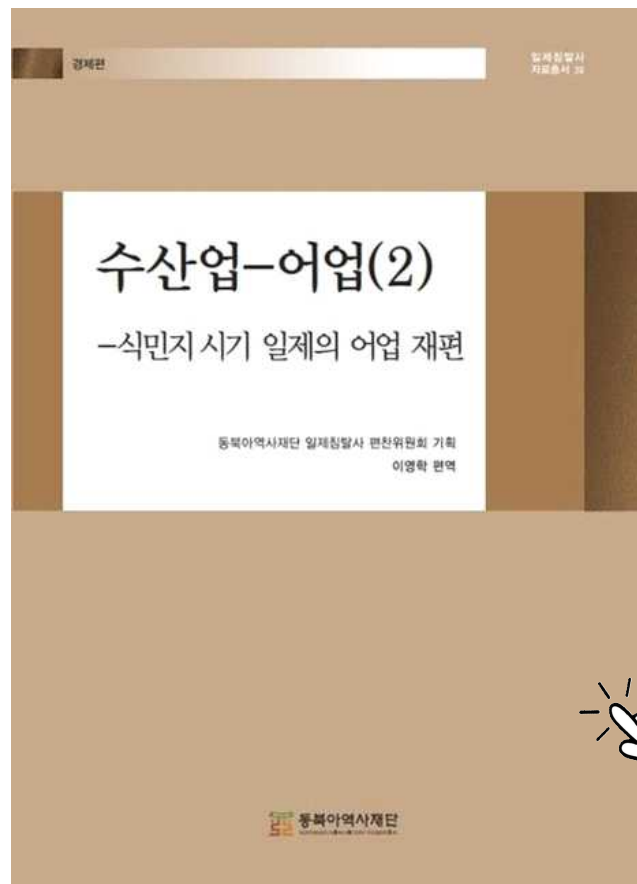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염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번역·정리한 것이다. 식민지 시기 소금의 생산과 유통, 염업 관련 정책과 제도,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관찬사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당시의 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1차 사료를 폭넓게 활용했다. 《황성신문》, 《매일신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 기사와 함께 외무성, 농상공부, 탁지부, 전매국 등이 생산한 보고서와 논문 등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염업이 식민지 경제정책과 전매제도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염업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고, 식민지 경제사의 구체적 실상을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독자에게 유용한 길잡이를 제공한다.



수산업-어업(1) 개항기 일제의 어업 침탈

이영학 편역 | 734쪽 | 38,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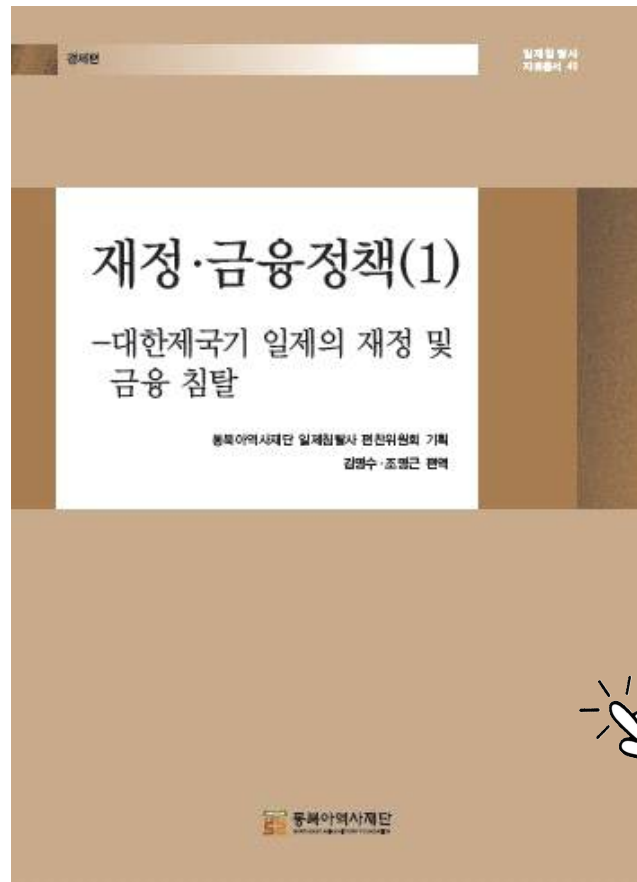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1876년 개항부터 1908년 통감부의 「어업법」 시행 전까지 일제가 조선 연해에서 전개한 어업 침탈과 이에 대한 조선 정부 및 조선 어민의 대응을 보여준다. 당시 관련 자료와 신문 등에 기록된 일본 어민의 침탈 과정, 조선 어민의 대응, 조선 어촌의 실상을 함께 수록한다. 이를 통해 개항 이후 조선 연해가 일본 어업 세력의 침투와 제도적 장악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경제 침략과 식민지화 과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기초 자료이자, 조선 어촌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기록을 제공한다.



수산업-어업(2) 식민지 시기 일제의 어업 재편

이영학 편역 | 776쪽 | 4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5-9

이 자료집은 1908년 「어업법」 시행 이후부터 1920년대 중반 어선의 동력화와 자본주의 어업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의 어업 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이다. 1908년 어업에 관한 협정과 「어업법」 공포부터 1929년 「조선어업령」 공포 이전까지 어업 관련 법령과 규칙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이를 통해 어업법 제정 과정과 그 결과, 이에 대한 조선 어민의 대응과 저항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식민지 어업 제도가 조선 연해의 이용 질서와 어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식민지 수탈의 실상과 조선 어민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풍부한 사료를 제공한다.



재정·금융정책(1)

대한제국기 일제의 재정 및 금융 침탈

김명수 · 조명근 편역 | 784쪽 | 43,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84-8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경제를 식민지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한국의 화폐금융제도를 자신들의 금융 체계에 종속시키는 일이었다. 이 자료집은 일본 제일은행 부산지점, 한국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의 설립 과정과 운영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편역한 것이다. 또한 재정고문 메가타 다네타로가 주도한 화폐정리사업과 재정정리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수록한다. 이를 통해 일제가 한국의 금융 주권을 침탈하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화폐금융제도를 구축해 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한국 금융 장악 과정과 경제 침탈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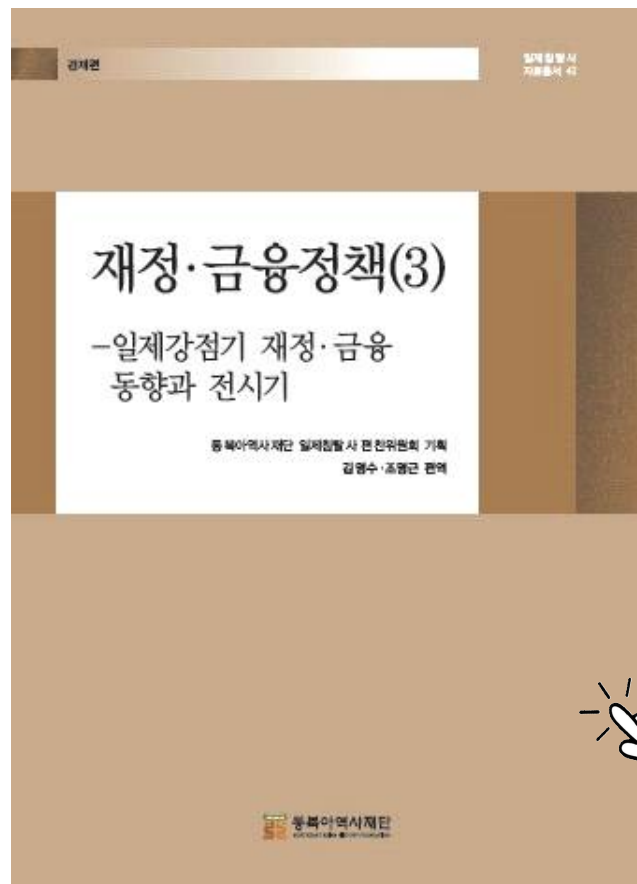


재정·금융정책(2)

일제강점기 특수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의 동향

김명수 · 조명근 편역 | 868쪽 | 4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43-3

이 자료집은 일제하 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보통은행 관련 자료와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서민금융 관련 자료를 모아 번역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금융이 어떠한 제도와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식민지 금융 체계가 중앙은행, 특수은행, 일반은행,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선 사회에 작동한 양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록 자료 가운데에는 자료적 가치가 높지 않은 개관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 당대의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한 기초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재정·금융정책(3)

일제강점기 재정·금융 동향과 전시기

김명수 · 조명근 편역 | 764쪽 | 42,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0-7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재정·금융의 전반적인 흐름과 조선은행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시기 금융정책 관련 자료를 엮은 것이다. 전시기 금융·재정 정책, 경제통제와 물가정책, 강제저축 및 공채 소화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록했으며, 일본은행 조사국이 편찬한 전시 금융통제자료와 조선은행권 발행제도 개정 관련 문헌도 번역해 실었다.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의 식민지 금융정책과 전시 자금 동원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일제의 경제 통치와 침략전쟁 수행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한 제국기와 일제강점기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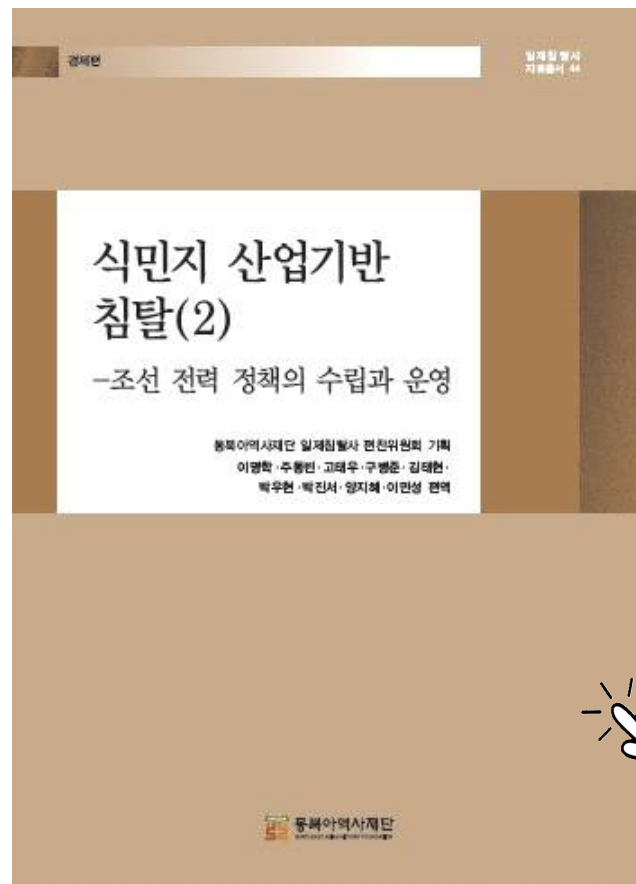
식민지 산업기반 침탈(1)

조선 철도 정책의 수립과 운영

양지혜 · 박우현 · 김태현 · 고태우 · 이명학 · 박진서 · 구병준 · 이민성 편역

700쪽 | 4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98-8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한반도에도 철도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945년 8월 광복에 이르기까지 철도는 조선과 조선인을 위한 기반 시설로 운영되지 못했다. 일제 지배 아래 조선의 철도는 일본제국의 지배와 침략을 위해 대륙으로 군대와 물자를 수송하는 침략로이자, 한반도의 자원과 인력을 일본으로 동원하는 수탈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집은 일제하 한국철도의 구상과 정책, 건설과 운영, 그 결과와 영향에 관한 방대한 자료 가운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핵심 자료를 선별해 수록했다. 이를 통해 명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하 철도 형성의 역사와 그 침탈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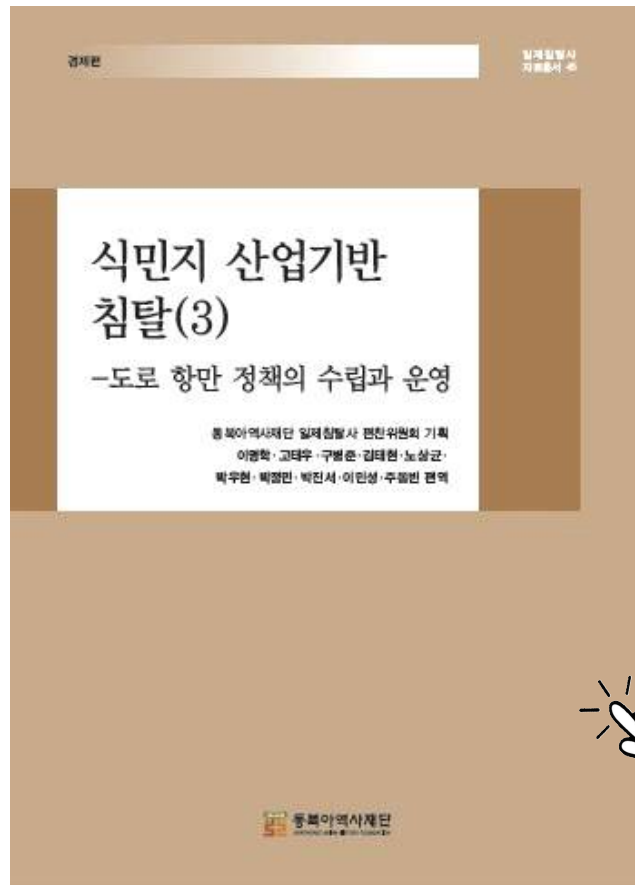
식민지 산업기반 침탈(2)

조선 전력 정책의 수립과 운영

이명학 · 주동빈 · 고태우 · 구병준 · 김태현 · 박우현 · 박진서 · 양지혜 · 이민성 편역

736쪽 | 4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62-6

일제강점기 조선의 전력산업은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대신한 대규모 수력발전 개발에 힘입어 발전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력 정책과 연동된 전력산업의 외형적 성장은 조선인 사회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생산된 전력은 조선인의 생활 개선보다 일본 자본과 군수산업, 식민지 개발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집은 일제시기 전력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전력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의 전개 과정과 사회적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록했다. 당대의 실상을 드러내는 이 자료들을 통해 일제시기에 형성된 전력체계의 식민성과 침탈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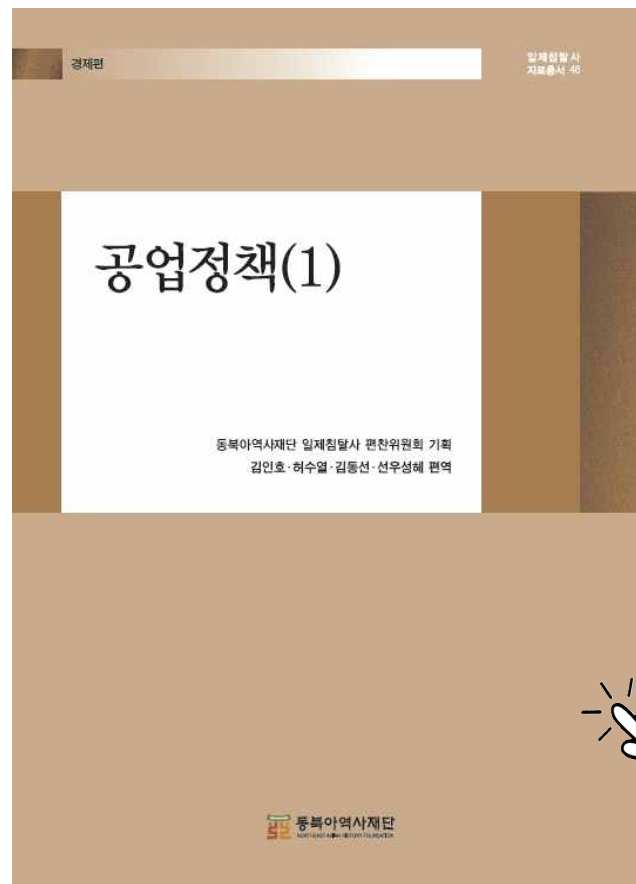
식민지 산업기반 침탈(3)

도로 항만 정책의 수립과 운영

이명학 · 주동빈 · 고태우 · 구병준 · 김태현 · 박우현 · 박진서 · 양지혜 · 이민성 편역

782쪽 | 4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8-3

근대 자본주의 체제는 시간의 단축과 공간의 압축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동력 계통의 혁신이었다. 일제강점기 항만과 도로는 근대적 산업기반 시설로 정비되었으나, 그 목적은 한반도를 자원 공급기지로 확충하고 대륙 침략을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이 자료집은 일제시기 항만·도로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비롯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와 조선인의 대응에 관한 자료를 실었다. 당시 법령과 정책 자료 등을 통해 항만·도로의 계획과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동원된 식민지민의 실태와 반응을 고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산업기반 시설의 전개 양상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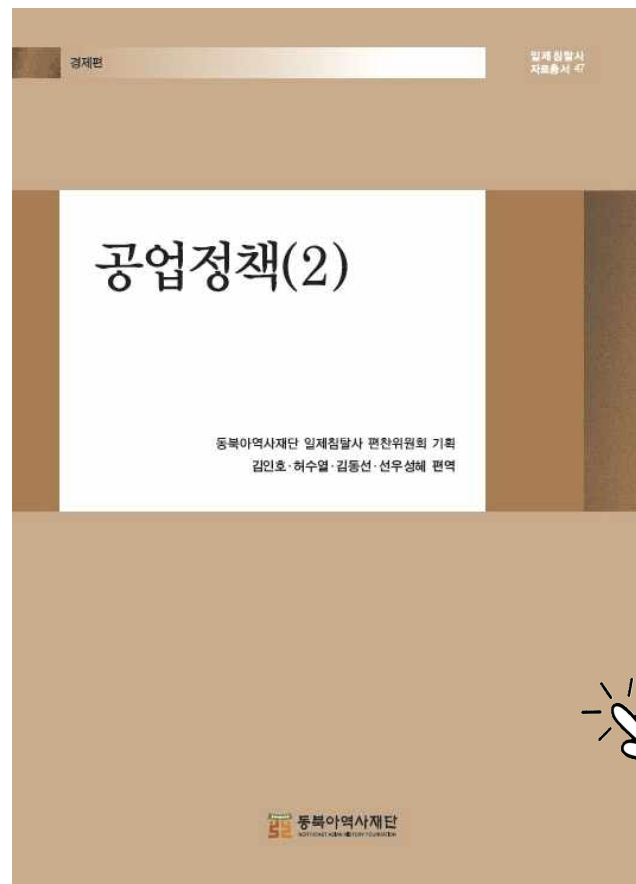


공업정책(1)

김인호 · 허수열 · 김동선 · 선우성혜 편역

880쪽 | 47,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68-0

이 자료집은 ‘총독부의 야만적인 정책에 따른 식민지 공업의 전면적 파페’라는 단선적인 정책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제강점기 공업정책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시기별로 재구성한 것이다. 총독부의 공업정책 총설, 위무형 공업정책, 산미증식계획 시기, 9·18사변 이후 공업정책 등 1910년대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자료를 수록했다. 이를 통해 조선 공업정책이 식민지 지배와 전시 동원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개발과 증산의 명분 아래 조선인의 희생과 내핍을 바탕으로 무제한적인 물자 동원을 자행했던 총독부 공업정책의 침탈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공업정책(2)

김인호 · 허수열 · 김동선 · 선우성애 편역

1156쪽 | 50,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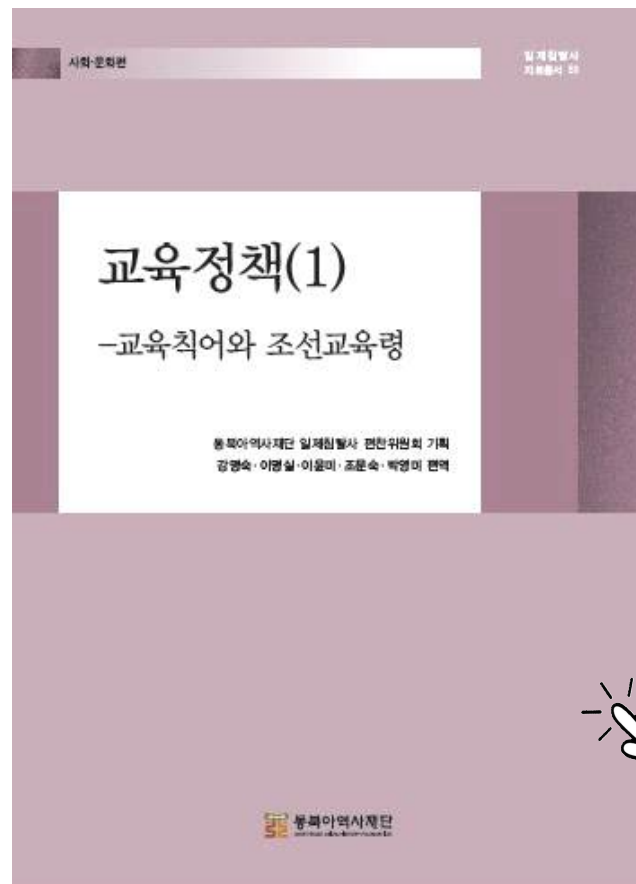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중일전쟁 시기의 생산력 확충 계획과 중소기업 조직화, 태평양전쟁 전후의 중점주의 증산 정책과 엔블록(円 block)의 산업 연관, 이른바 ‘결전’ 시기의 ‘초중점’ 증산정책과 공업 파탄, 종합 통계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가 조선 공업정책의 재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동원과 생산력 확대 논리가 조선 공업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총독부 관료들이 남긴 담화와 통계 자료는 당대의 실상을 반영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그들만의 염원을 담은 일종의 선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그 속에 숨겨진 염원과 기만, 과장, 차별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광업(1) 침탈 기반의 구축

도면화·배석만 편역 | 634쪽 | 40,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74-1

이 자료집은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 말기까지 한반도 광업의 변화와 일제의 광산 침탈 과정을 담고 있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광산 개발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했으며, 식민 지화 이후에는 광범위한 탐광과 조사를 통해 필요한 광물을 대대적으로 채굴하여 일본으로 이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광업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자원 수탈 체계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930년대 전시체제 구축과 폐쇄적 블록경제의 작동, 일제 말기로 갈수록 강화된 전쟁 수행 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광물이 군수 자원으로 수탈되어 간 실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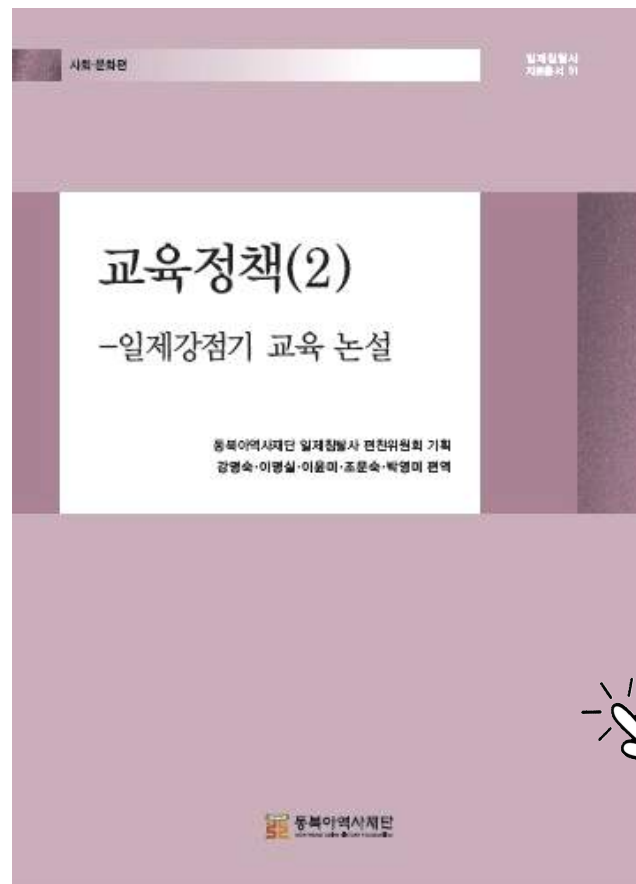


교육정책(1) 교육칙어와 조선교육령

강명숙 · 이명실 · 이윤미 · 박영미 · 조문숙 편역

606쪽 | 35,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88-9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조선교육의 기본 법령과 제도적 근거가 된 교육칙어와 조선교육령 관련 자료를 모은 것이다. 조선교육령과 각급 학교의 규칙 및 제도를 비롯해 식민지 교육정책 수립에 관여한 인물들의 주장과 논의, 교육령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훈령, 훈시 등을 폭넓게 수록했다. 특히 제도와 담론, 행정 문서를 함께 실려봄으로써 식민지 교육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가 식민지 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운영했으며, 그 목적과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교육정책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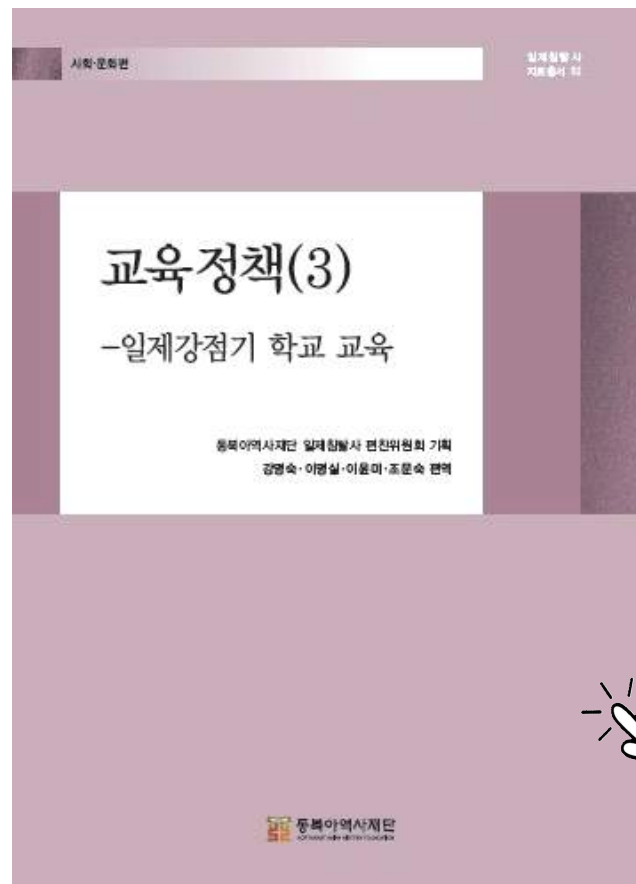


교육정책(2) 일제강점기 교육 논설

강명숙 · 이명실 · 이윤미 · 박영미 · 조문숙 편역

482쪽 | 3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19-0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조선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과 논저를 한 데 모은 것이다. 일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제도화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지배를 정당화하고 피지배민의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조선총독부 학무 행정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의 대표 저작,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글, 식민사관에 입각해 조선교육의 역사를 해석한 글 등을 수록했다. 이를 통해 식민지 교육이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지배 이념의 확산과 내면화를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식민지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와 논쟁을 통해 일제 교육정책의 성격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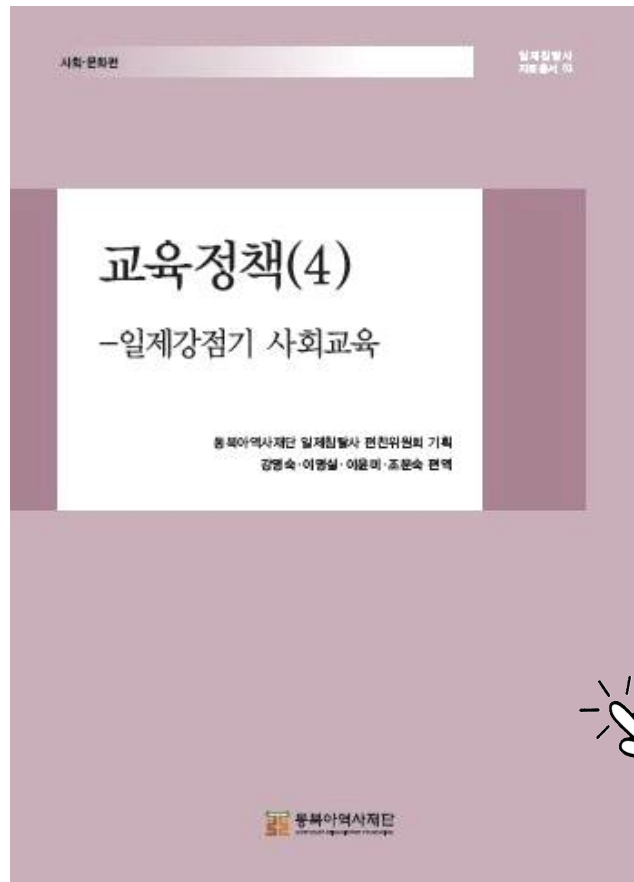


교육정책(3) 일제강점기 학교 교육

강명숙 · 이명실 · 이윤미 · 조문숙 편역

668쪽 | 38,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44-0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학교 교육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초등교육 기회 보급과 고등교육 제도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 제정 이후 식민지 조선의 학교 현장에서 황민화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선별해 수록했다. 특히 식민 당국자, 교육계 인사, 교원들의 논의와 고민을 통해 황민화 교육이 제도와 학교 현장에서 작동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과 그 실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정책(4) 일제강점기 사회교육

강명숙 · 이명실 · 이윤미 · 조문숙 편역

704쪽 | 4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55-3

이 자료집은 식민지민 교화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회교육 관련 자료를 모은 것이다. 민중교육, 사회 개선교육, 교화교육 등으로 불리던 사회교육은 안정적인 식민 통치와 민중 교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사회교육 정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특히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정책, 행정 자료 및 담론을 폭넓게 담았다. 또한 사회교육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식민지 지배 이념을 확산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진 사회교육의 내용과 목적, 식민지 통치 체제 속에서 그것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상통제(1)

사상통제 관련 법규와 통제 주체

홍선영 · 박미경 · 복보경 · 윤소영 편역

664쪽 | 42,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21-3

일제강점기 조선 내 일본 사법 당국은 조선인에 대해 집요한 사상통제 정책을 펼쳤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사상통제와 관련된 법령, 당시 사회 인식, 통제 주체와 통치 기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시기별로 선별해 수록한 것이다. 사상 단속을 위한 법령의 제정과 변천 과정, 사상 탄압을 실행한 조선총독부 경찰 조직과 일본 내무성의公安경찰, 법무성의 사상검사 등 통제 기구의 편성과 구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사상통제가 법령과 제도에 그치지 않고 경찰·검찰 등 권력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 체계를 통해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사상통제 정책의 구조와 성격, 그리고 식민지 지배 체제 속에서 그것이 수행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상통제(2)

사상통제의 실제: 사찰과 탄압 양상

홍선영 · 박미경 · 복보경 · 윤소영 편역

820쪽 | 45,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85-5

이 자료집은 각종 법령과 탄압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상 탄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특히 ‘사상탄압의 실제’라는 주제가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경찰과 사법당국의 사찰에서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선별했다. 사상탄압 지침, 경험담에 입각한 조언, 사상 검사들의 협의 내용, 검거 현장에 대한 경찰 측 기록, 고문(拷問)에 대한 증언 등을 통해 당시 사상통제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상 탄압이 법령과 제도에 머물지 않고, 수사·검거·신문·재판으로 이어지는 통치 실무 속에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사상통제의 실제와 폭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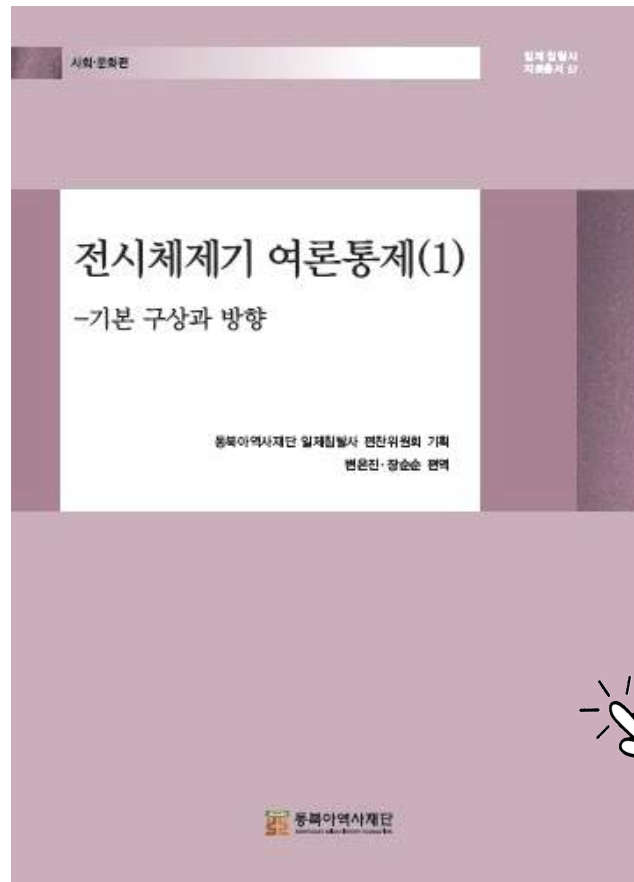
사상통제(3)

일제 말기 확장하는 사상 탄압과 그 붕괴

윤소영 · 홍선영 · 박미경 · 복보경 편역

860쪽 | 45,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9-0

이 자료집은 일제 말기 사상 탄압 정책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를 선별해 수록한 것이다. 자료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전향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한 식민 당국의 자료와 전향한 개인 및 단체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다른 하나는 일제의 사상 탄압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전개된 독립운동 관련 자료와 전향을 거부한 인사들의 자료다.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사상통제가 전향 강요와 저항 탄압이라는 양면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국내에 처음 번역·소개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일제 말기 사상통제와 전향정책 연구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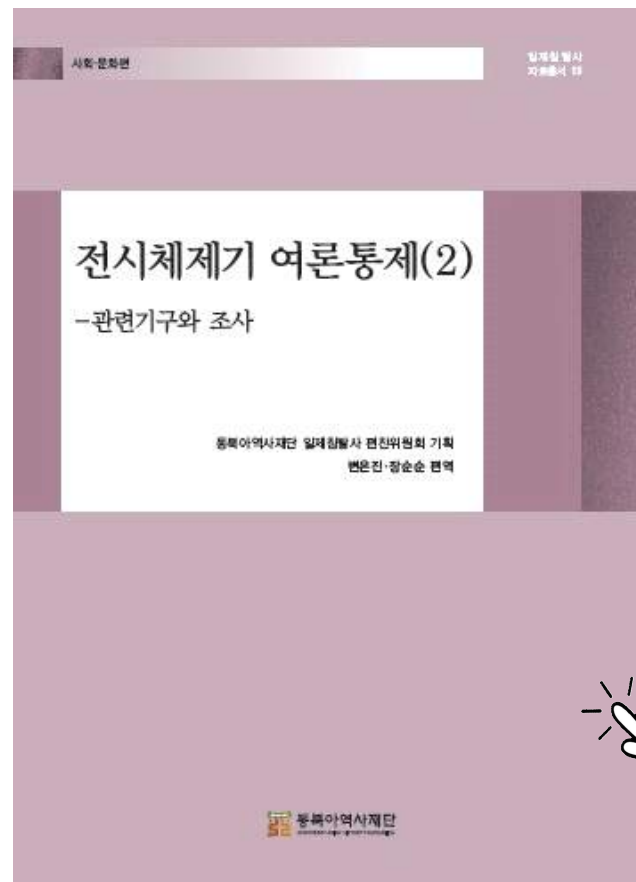


전시체제기 여론통제(1)

기본 구상과 방향

변은진 · 장순순 편역 | 600쪽 | 38,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03-9

이 자료집은 전시체제기 일제 당국의 여론통제에 관한 기본 구상과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유연비어가 만연하게 된 현상을 이해하고, 그 배경을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록했다. 특히 여론통제가 사상통제와 선전정책, 조선인 동향 파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기 일제 당국의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여론·사상·선전 정책의 목적과 배경, 유연비어 등 조선인의 ‘불온 언동’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인 여론 통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강조점, 일본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여론·선전 정책의 기본 방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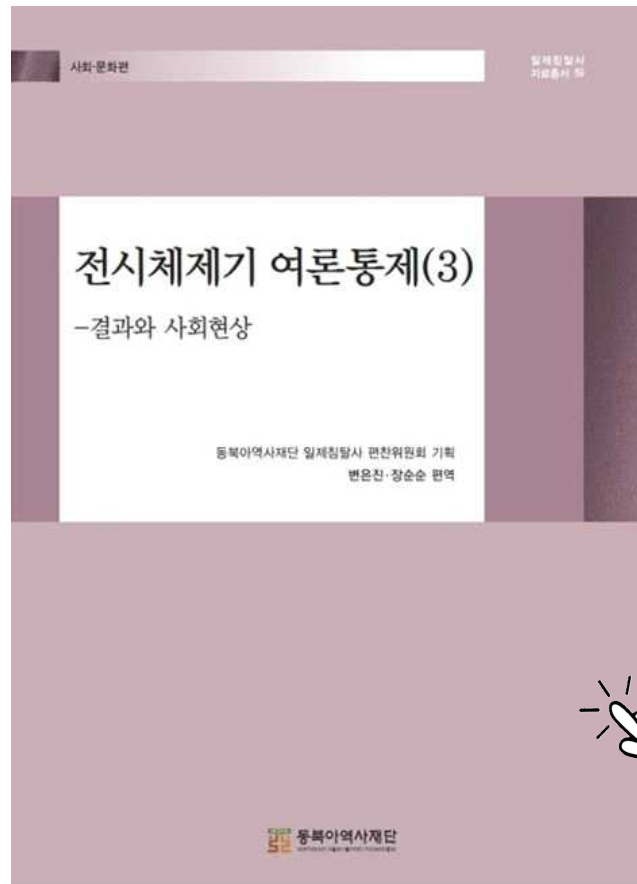


전시체제기 여론통제(2)

관련기구와 조사

변은진·장순순 편역 | 648쪽 | 38,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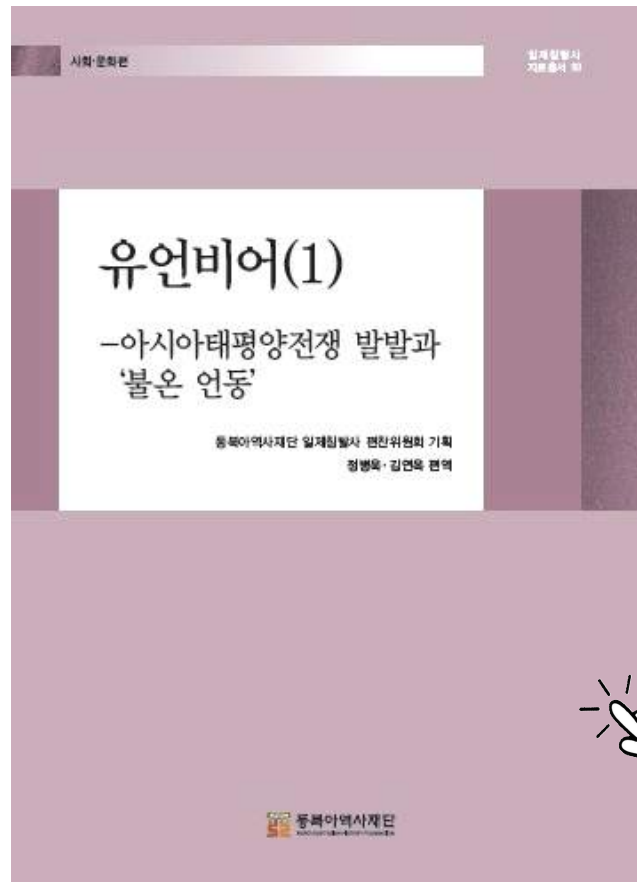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의 여론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운영된 주요 기관과 정책,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것이다.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조선방공협회, 조선군 보도부, 시국좌담회, 여론동향조사 등 전시체제기 여론통제의 핵심 기구와 사업을 중심으로 총 37종의 자료를 선별·번역해 수록했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했으며, 선전과 사상통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여론통제 목적과 실상, 그리고 식민 지배의 침탈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전시체제기 여론통제(3) 결과와 사회현상

변은진·장순순 편역 | 604쪽 | 38,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61-4

이 책은 전시체제기 일제 당국의 여론통제가 실제 사회현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특히 일제가 조선인의 의식과 여론을 전쟁 협력과 황국신민화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 다양한 형태의 균열과 이탈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전시체제기 여론통제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식민지 조선 사회의 민심과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제강점기 사회사와 여론통제 연구에 의미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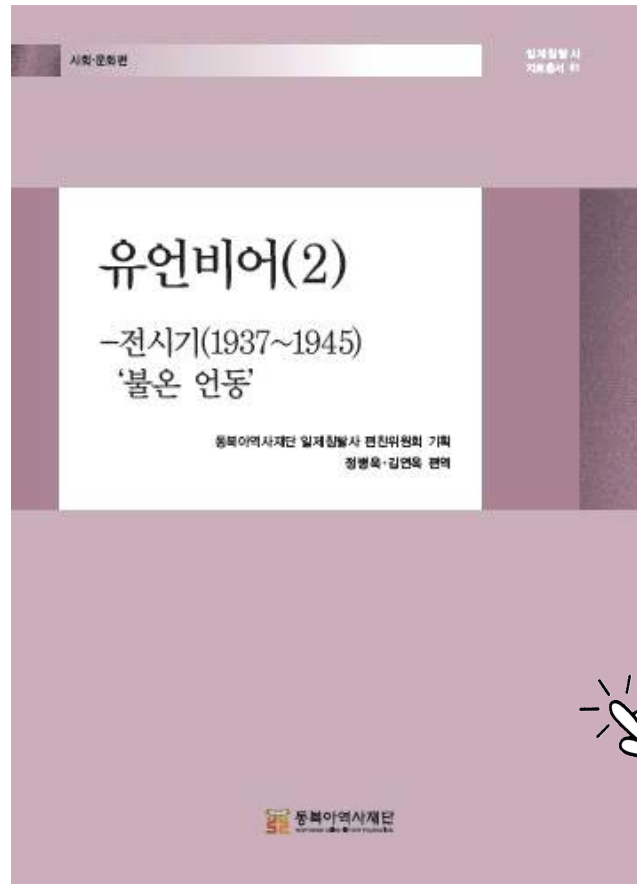


유언비어(1)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과 ‘불온 언동’

정병욱 · 김연옥 편역 | 560쪽 | 33,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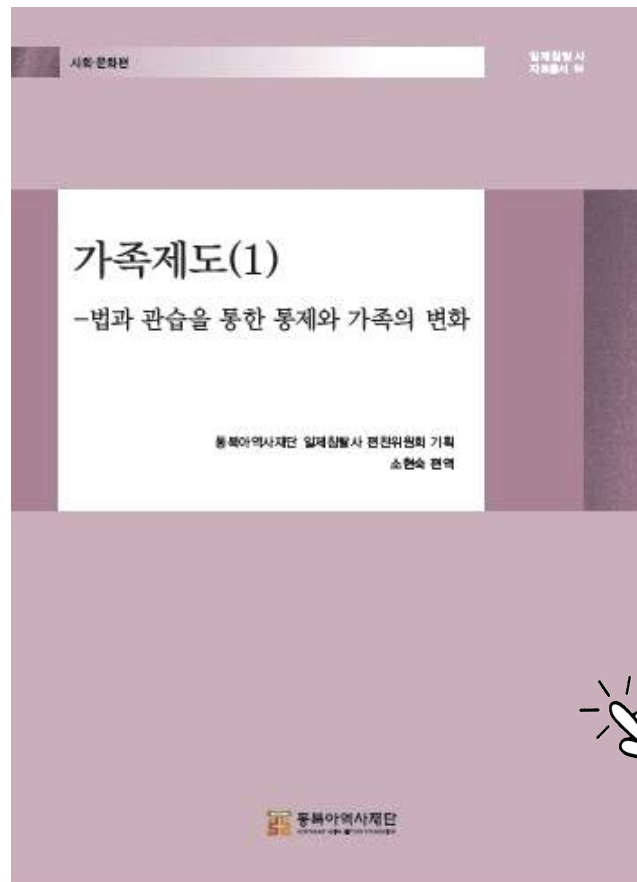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1943년 5월과 8월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가 펴낸 『대동아전쟁 발발 후 특수범죄 조서: 유언비어와 불경 사건』과 『대동아전쟁 발발 후 특수범죄 조서: 보안법 위반사건과 일본 등지의 각종 언론사범』을 번역한 것이다. 이 시기 ‘불온 언동’ 관련 사료는 전시체제가 조선 민중의 일상 속에서 지배와 저항이 어떻게 교차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유언비어, 불경 사건, 보안법 위반, 언론 사범 등의 사례를 통해 일제의 통제 정책과 조선 민중의 대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의 지배와 저항의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유언비어(2) 전시기(1937~1945) '불온 언동'

정병욱 · 김연옥 편역 | 672쪽 | 38,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45-7

이 자료집은 1937년경부터 1945년경까지 일제 당국에 포착된 불온 언동을 모아 번역한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군(軍), 경(警), 검(檢) 4개 기관이 생산한 6개 자료를 수록했다. 특히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45년 일본 패전까지 전시기에 나타난 개인의 불온 언동, 불경 사건, 유언비어, 불온 낙서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가 재일조선인이 처한 현실과 일상 속에서 드러난 생각, 감정, 대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전시기 재일조선인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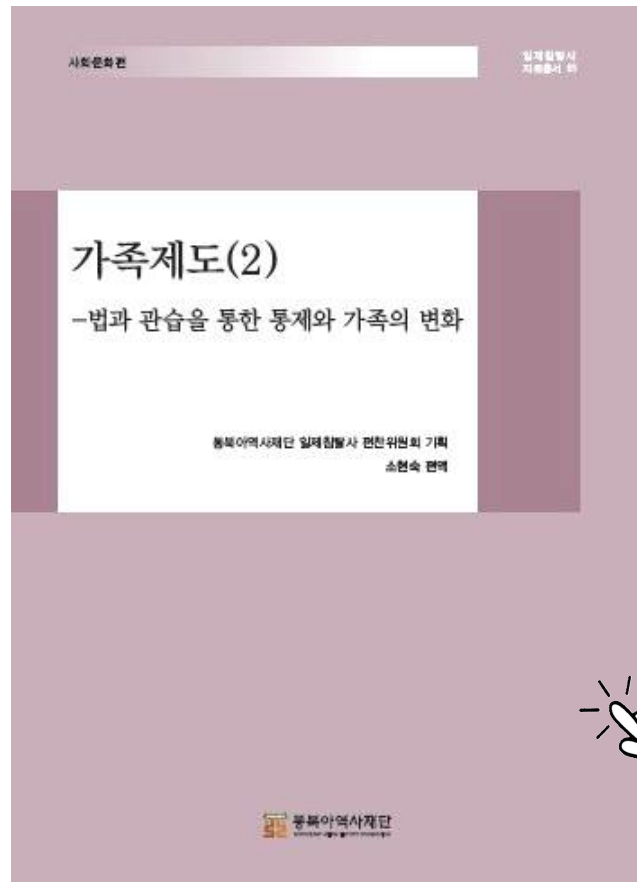


가족제도(1)

법과 관습을 통한 통제와 가족의 변화

소현숙 편역 | 466쪽 | 3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60-0

이 자료집은 「민적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등 가족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개정 내용을 번역·수록한 것이다. 또한 이 법령들이 도입된 배경과 시행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민적법의 설명」, 「민적사무개요」 등 일제가 편찬한 자료와 조선총독부 관료의 회고담을 실은 잡지 자료 등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일제가 가족제도를 식민지 지배의 제도적 장치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가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 지배와 그 상처, 그리고 그에 따른 부의 유산을 기억함으로써 일제침탈사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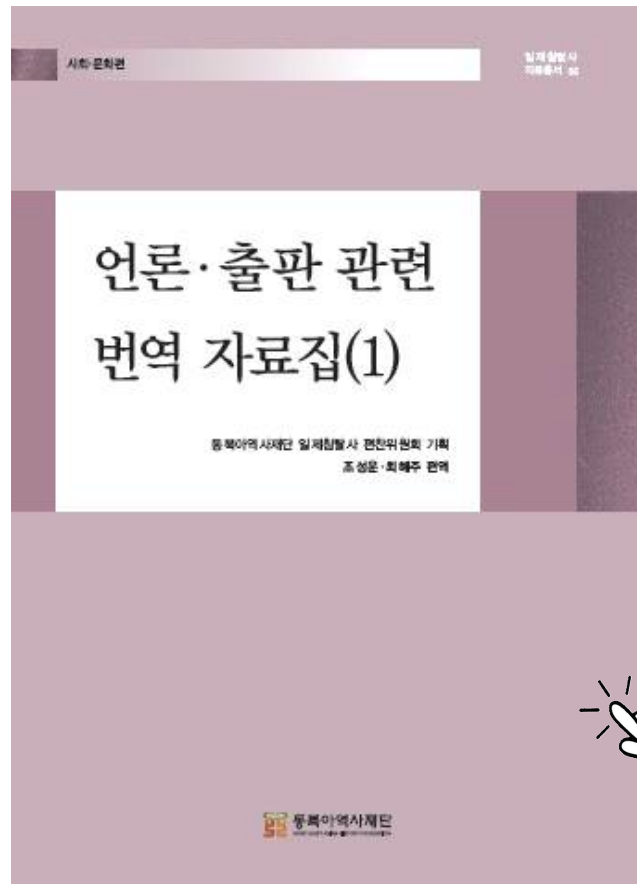


가족제도(2)

법과 관습을 통한 통제와 가족의 변화

소현숙 편역 | 524쪽 | 32,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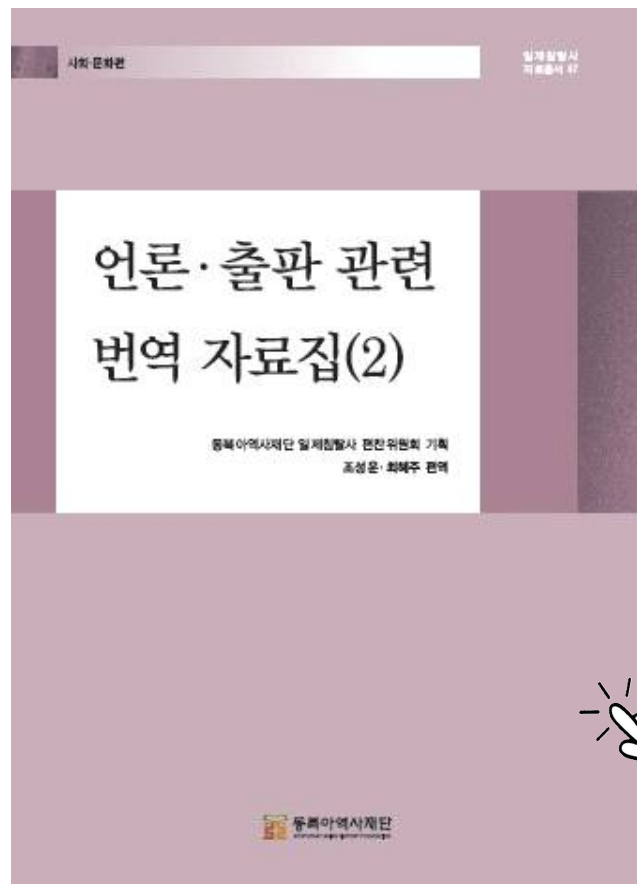
이 책은 가족개혁 논의가 대두한 19세기 말부터 통감부 시기, 「조선민사령」의 도입과 변화 과정, 일제의 동화주의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나타난 법적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특히 가족 제도가 단순한 사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식민지 지배 질서를 제도화하는 핵심 장치로 활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령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일제가 조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은 가족에 대한 일본제국주의 지배와 그 상처, 그리고 그에 따른 부의 유산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가족정책의 실태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언론·출판 관련 번역 자료집(1)

조성운·최혜주 편역 | 580쪽 | 35,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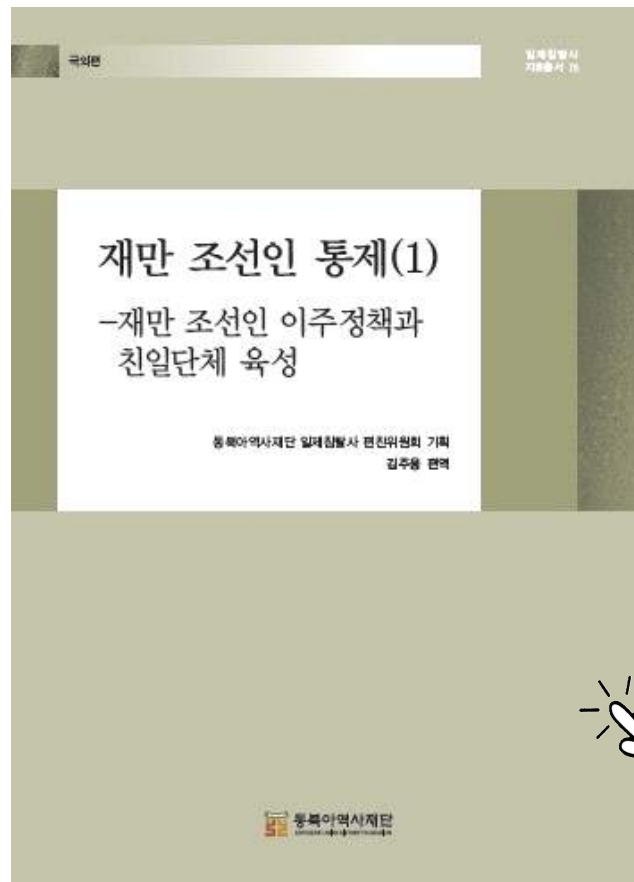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조선총독부가 어떠한 관점에서 언론·출판정책을 시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두 자료는 조선총독부 언론통제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료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 수록된 기사 가운데 풍속을 해치는 기사나 국제 교의를 저해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총독부의 언론통제가 주로 식민지 지배정책에 어긋나는 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언론정책과 통제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조선 사회의 현실과 민중의 목소리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언론·출판 관련 번역 자료집(2)

조성운·최혜주 편역 | 736쪽 | 42,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72-7

이 자료집은 1권의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언론통제 관련 신문 기사를 수록한 것이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당대 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 일제의 언론통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일제가 어떠한 정보를 차단하고자 했으며, 어떤 내용의 선전을 강조하고 확대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압수·검열 대상이 된 기사들을 통해 식민지 조선 사회의 정치·사회적 현실과 민중의 문제 의식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언론·출판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문학과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도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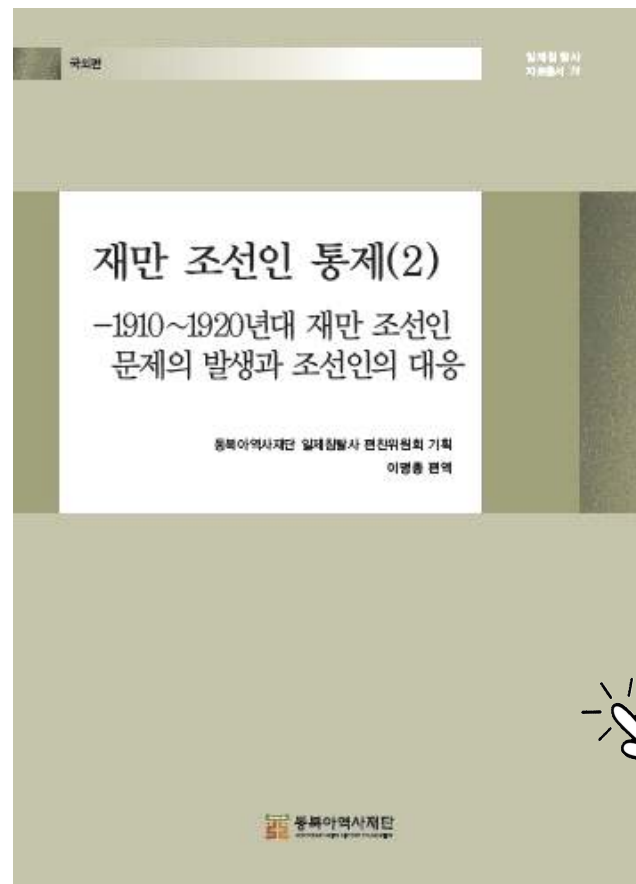


재만 조선인 통제(1)

재만 조선인 이주정책과 친일단체 육성

김주용 편역 | 582쪽 | 33,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23-7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만주 지역은 타이완, 조선과 함께 일제가 주목한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광활한 토지와 풍부한 지하자원, 산림자원 등을 보유한 만주는 일본의 대륙 침략 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이 자료집은 만주 지역의 일제침탈사 가운데 조선인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1907년 통감부 간도 파출소 설치 전후 일제가 간도를 비롯한 만주 지역에 대한 침탈을 강화하고자 했던 배경과 과정을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일제의 대륙 침략 정책과 만주 지역 한인 사회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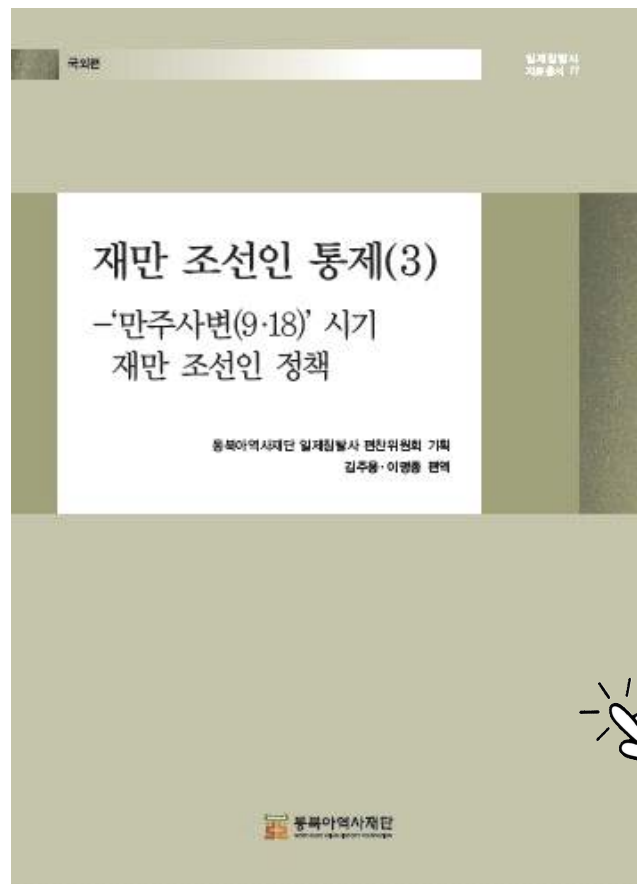


재만 조선인 통제(2)

1910~1920년대 재만 조선인 문제의 발생과 조선인의 대응

이명중 편역 | 504쪽 | 33,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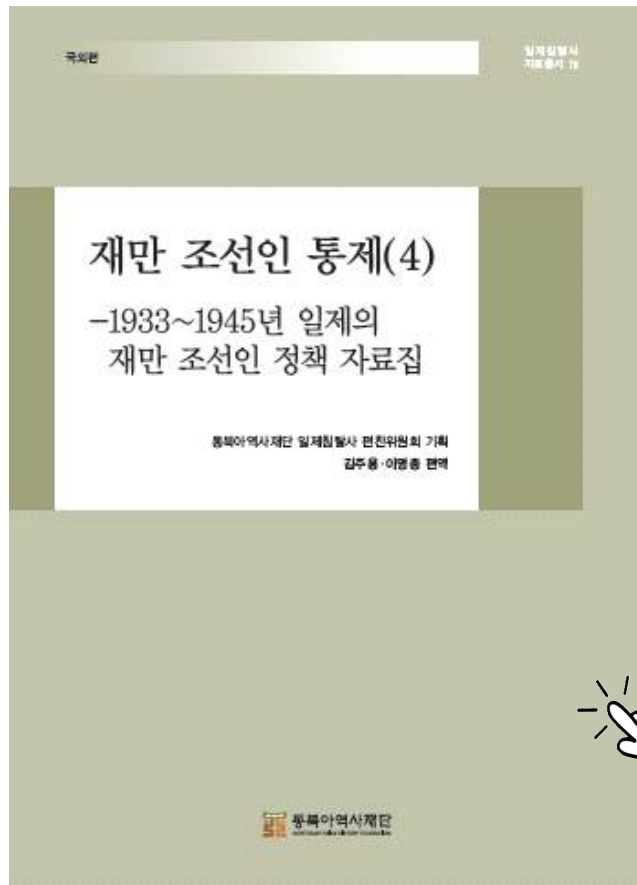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1910~1920년대 재만 조선인 문제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한 것이다. 1915년 ‘남만동몽조약(南滿東蒙條約)’, 치외법권, 토지상조권, 이중국적 문제, 재만 조선인에 대한 취체정책과 박해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당시 재만 조선인이 처한 복합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재만 조선인이 일제의 민족 차별 정책과 중국 관헌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평등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간 과정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재만 조선인이 겪은 차별과 고난의 역사, 그리고 이중의 억압을 견디며 삶의 기반을 지켜낸 조선 민족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만주 침략 정책과 재만 조선인 사회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재만 조선인 통제(3) ‘만주사변(9·18)’ 시기 재만 조선인 정책

김주용 · 이명중 편역 | 524쪽 | 3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82-4

이 자료집은 만주 지역의 일제침탈사 가운데 조선인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히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부터 일본의 만주 침략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만 조선인 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원인 속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일제의 만주 침략 정책이 재만 조선인 사회의 삶과 조직, 이동과 정착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만주 침략 정책과 재만 조선인 사회의 변동 양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식민지 지배와 민족 문제,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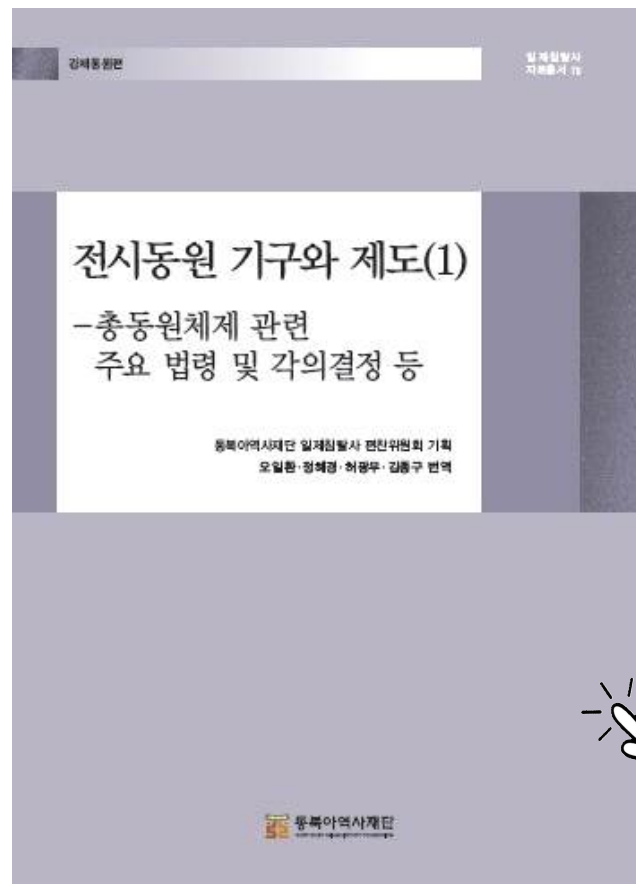


재만 조선인 통제(4)

1933~1945년 일제의 재만 조선인 정책 자료집

김주용 · 이명종 편역 | 608쪽 | 35,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54-6

만주국 성립 이후 만주 지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확장 정책과 인구 재편 전략이 집중적으로 전개된 공간이었다. 1930년대 초 약 100만 명이던 한인 이주자는 1945년 광복 당시 약 22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대부분은 흑룡강성 남부와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당시 한인 이주자들의 삶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제의 이주정책과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 한인 사회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자료집은 만주국 성립 이후 일제의 인구정책과 한인 이주 문제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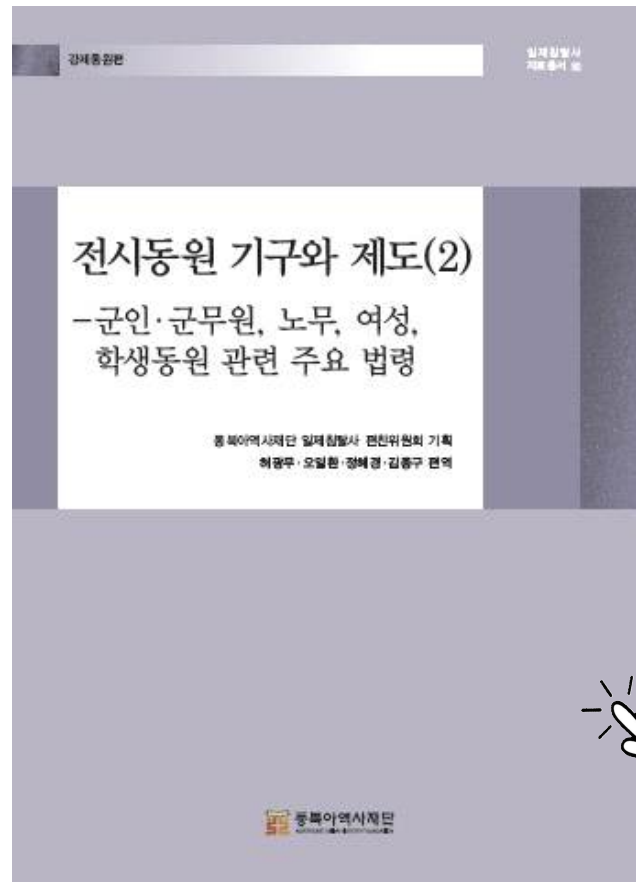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1)

총동원체제 관련 주요 법령 및 각의결정 등

오일환 · 정혜경 · 허광무 · 김종구 편역

672쪽 | 35,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52-7

이 책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 공포 이후부터 일본의 패전 직전까지 총동원체제에 관한 주요 법령과 각의결정 등 112건의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총동원체제와 직결된 주요 법령과 각의결정 가운데 가급적 조선에 시행된 것을 중심으로 선별했으며, 조선에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법령에 큰 영향을 미쳤거나 관련성이 높은 자료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전시체제가 일본의 총동원 정책이 식민지 조선에 어떻게 적용되고 변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전시체제가 강제동원의 구조와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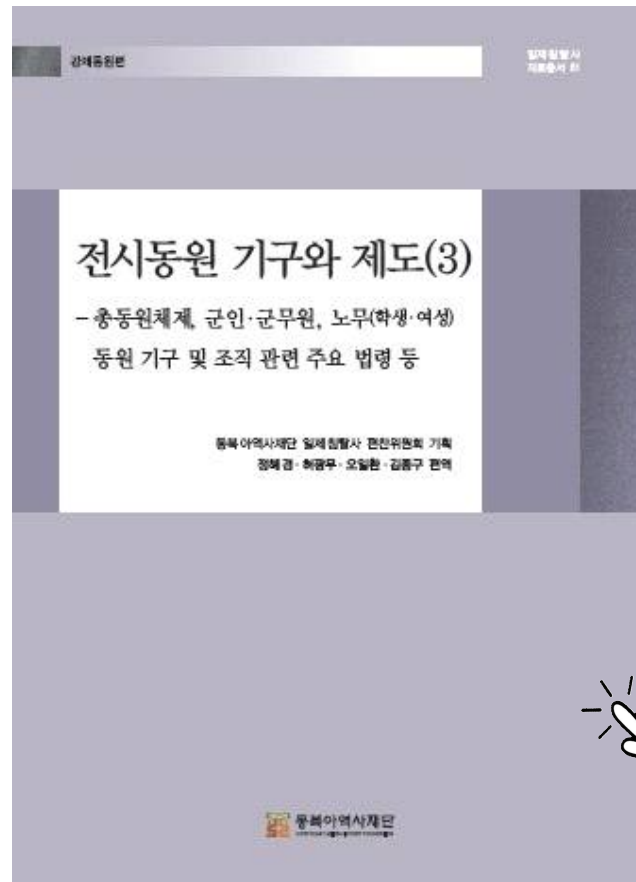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2)

군인·군무원, 노무, 여성, 학생동원 관련 주요 법령

오일환 · 정혜경 · 허광무 · 김종구 편역

972쪽 | 5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2-8

이 자료집은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 연구의 두 번째 결과물로, 노무동원 전반과 군인·군무원, 학생·학도, 여성 인력 동원 등 인적 동원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총동원체제와 인적 동원에 관한 주요 법령과 명령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전시동원체제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물적 동원 관련 법령과 정책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이를 통해 인적 동원과 물적 동원이 서로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체제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 동원 정책의 상호 연관성과 전시동원체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전시체제가 강제 동원의 제도적 기반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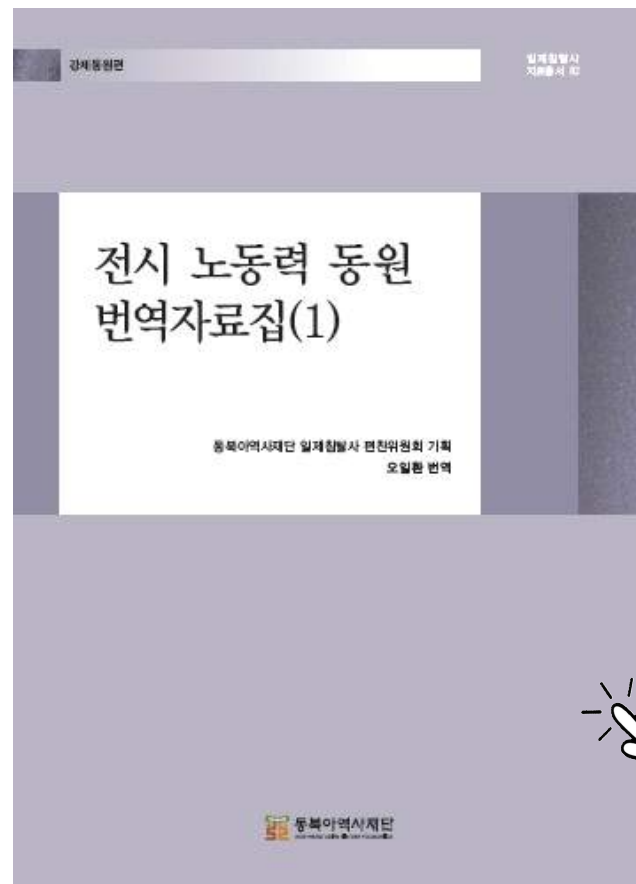
전시동원 기구와 제도(3)

총동원체제, 군인·군무원, 노무(학생·여성)
동원 기구 및 조직 관련 주요 법령 등

정혜경 · 허광무 · 오일환 · 김종구 편역

830쪽 | 40,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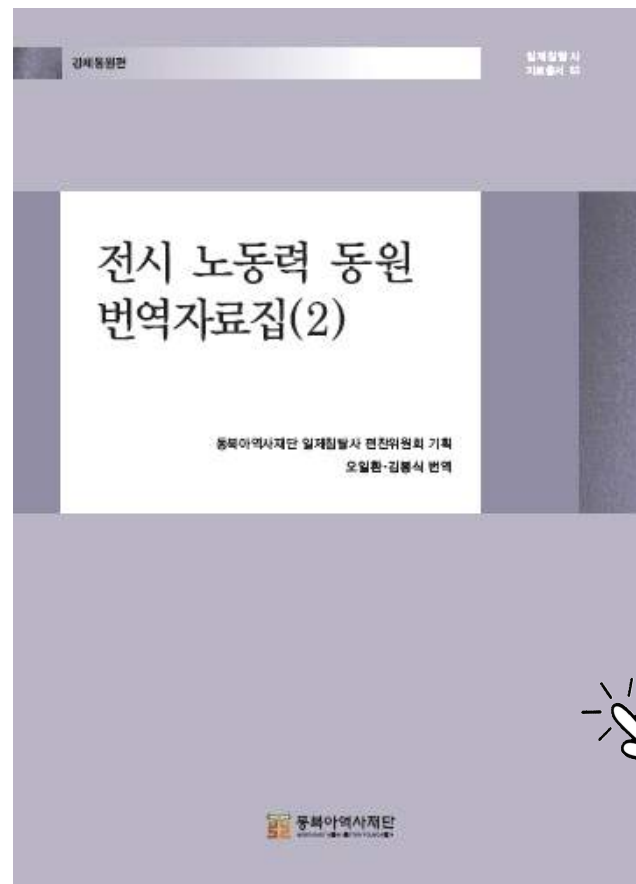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전시동원 관련 기구와 제도에 관한 법령 및 조선인의 저항 관련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중앙 행정 기구의 부서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에 걸쳐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 실태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전시동원 기구의 확대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 전쟁 수행 체제에 편입하기 위한 제도적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인의 저항 관련 자료를 함께 실려봄으로써 전시동원체제가 식민지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향후 총동원체제와 전시동원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연구자 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전시 노동력 동원 번역자료집(1)

오일환 번역 | 488쪽 | 3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00-8

이 자료집은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를 보여주는 『조선인 노무자의 관리에 대하여』, 『특수 노무자의 노무관리』, 「복명서」, 「노동자원조사에 관한 건」 등 4건의 자료를 번역한 것이다. 이 자료들은 가해자의 시선으로 기록된 문서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 제국의 의도와 정책,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특히 조선인 노무자의 모집과 배치, 관리와 통제 과정을 통해 강제동원 체제의 실상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가해 주체가 남긴 기록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강제동원의 책임과 피해의 양상을 보다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침략과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서 발생한 강제동원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전시 노동력 동원 번역자료집(2)

오일환·김봉식 번역 | 544쪽 | 33,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7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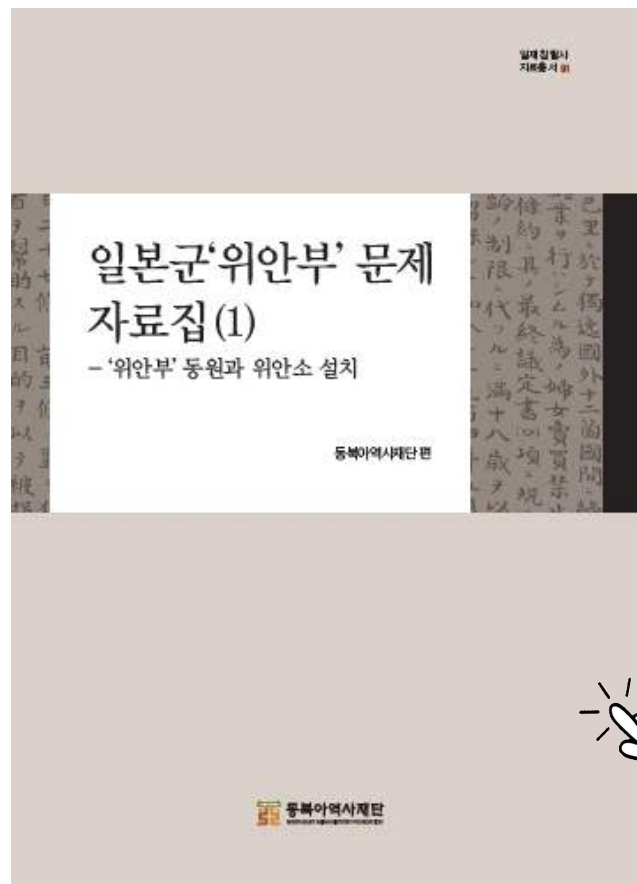
이 자료집은 전시 노동력 동원과 관련한 『반도노동자 근로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와 『공장 공산산업 보국회의 조직과 운영』 등 두 편의 자료를 수록한 것이다. 두 자료는 일제 말기 노무동원과 관련해 식민 당국과 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조선인 강제동원의 구조와 방식,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조선인 동원에 대한 일제와 기업의 인식과 논리,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진 관리와 통제의 양상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시 노동력 동원이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 속에서 조직·운영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제의 전시 노동력 동원 실태와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每日新報』로 본 강제동원

김윤미 편저 | 560쪽 | 30,000원 | 2023년 | ISBN 978-89-6187-794-7

이 자료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매일신보』, 『경성일보』, 『The Seoul Press』를 기관지로 발행하며 언론을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통제하고 활용했던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총동원법」 제정과 시행 전후인 1938년부터 1945년까지 8년 동안 생산된 『매일신보』 신문기사 가운데 대표적인 기사를 선별하여 편역했다. 수록된 기사들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명칭과 형태, 미담(美談) 기사와 왜곡보도 등을 통해 일제가 강제동원을 어떻게 선전하고 정당화했는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과 일제의 침탈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전시체제가 언론 선전과 강제동원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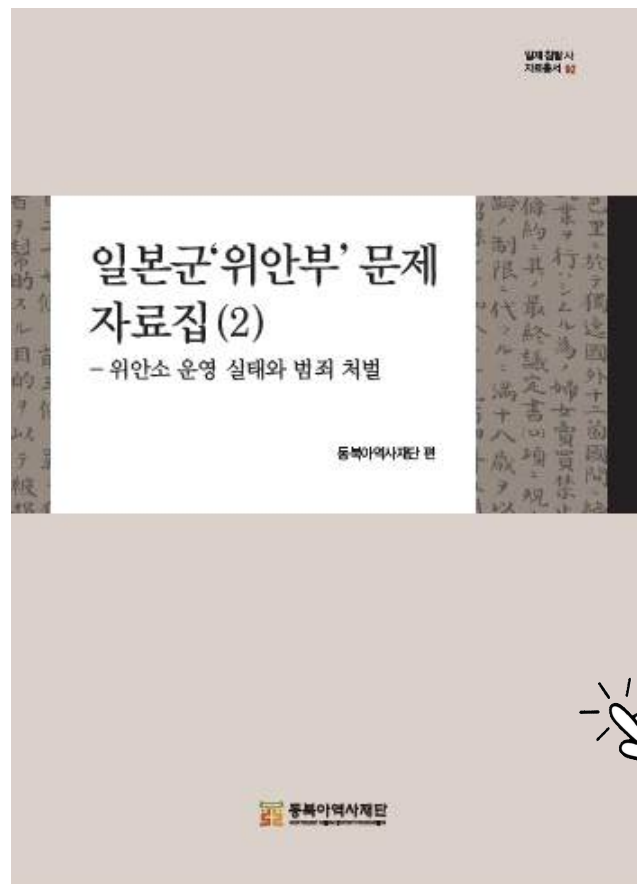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1)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동북아역사재단 편 | 488쪽 | 38,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40-0

이 자료집은 1990년대 이후 축적된 연구와 자료 수집 성과를 토대로, 일본군‘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관리가 일본군과 정부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일본군과 정부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공문서를 선별해 번역한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우발적이거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시체제와 군사 운영 속에서 조직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전시 성폭력과 국가 책임, 인권 문제를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책임 구조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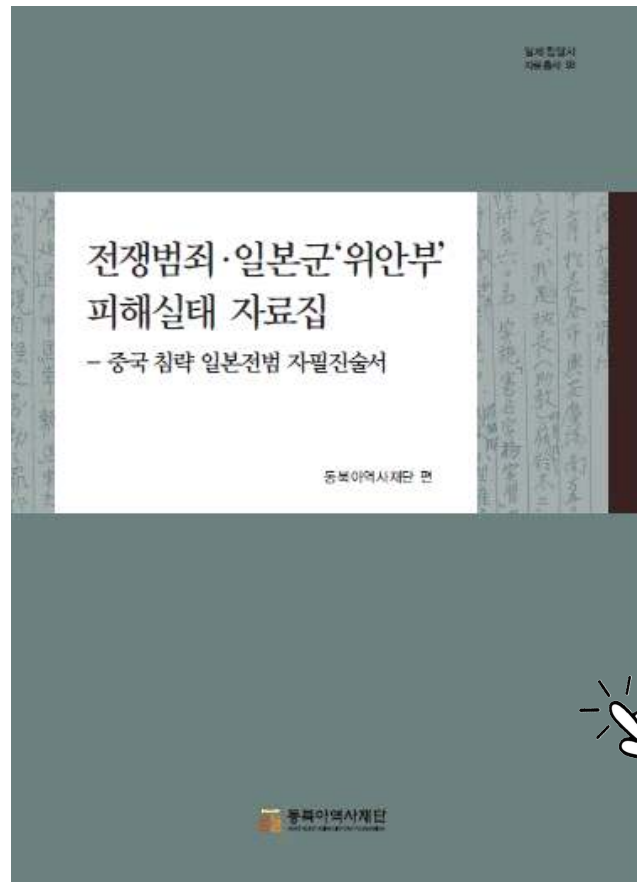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2)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동북아역사재단 편 | 617쪽 | 43,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41-7

이 자료집은 1990년대 이후 축적된 연구와 자료 수집 성과를 토대로, 일본군‘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운영이 일본군을 주체로 이루어졌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일본이 침략한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범죄 처벌, 전범 재판, 일본 대심원 판결 등을 다루는 자료를 수록했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전시체제와 군사 작전의 확대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국가 책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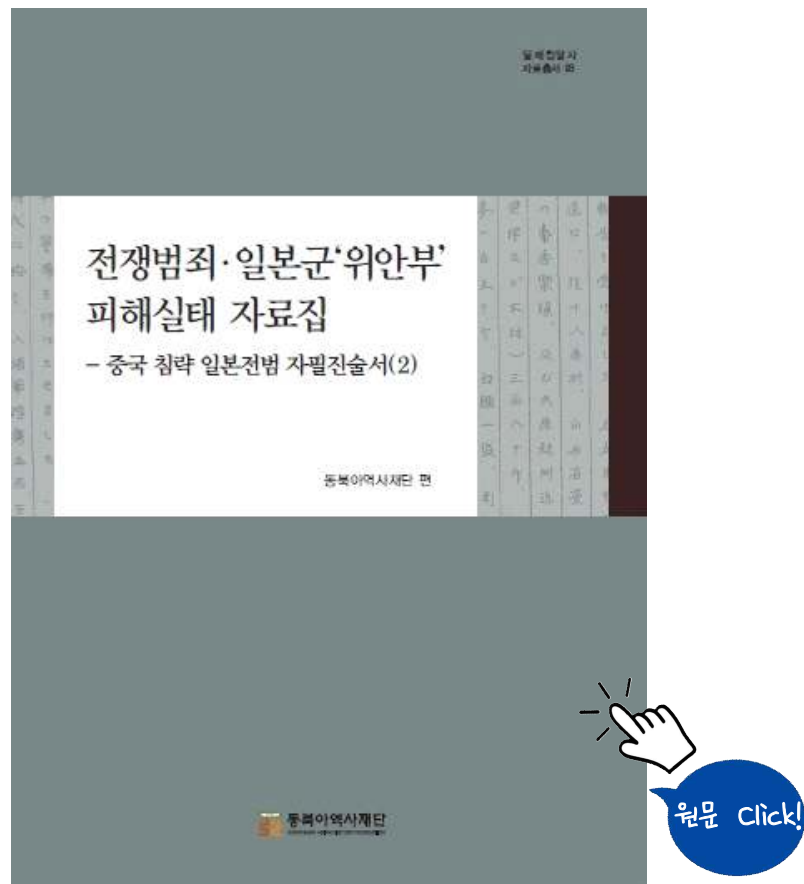


전쟁범죄·일본군‘위안부’ 피해실태 자료집

중국 침략 일본전범 자필진술서

동북아역사재단 편 | 200쪽 | 22,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607-0

이 자료집은 중국 중앙당안관이 공개한 일본군 전범 자필진술서 가운데 번역이 완료된 전범 5명의 진술서를 수록한 것이다. 전범 진술서는 일본군 전범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중국 내 군위안소 운영과 ‘위안부’ 유괴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일본군 전범의 범죄 실태를 밝히고, 전시 성폭력의 구조와 책임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이 자료집은 일제 침탈과 전시 성폭력 등 전쟁범죄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전하는 자료 발굴과 공개, 후속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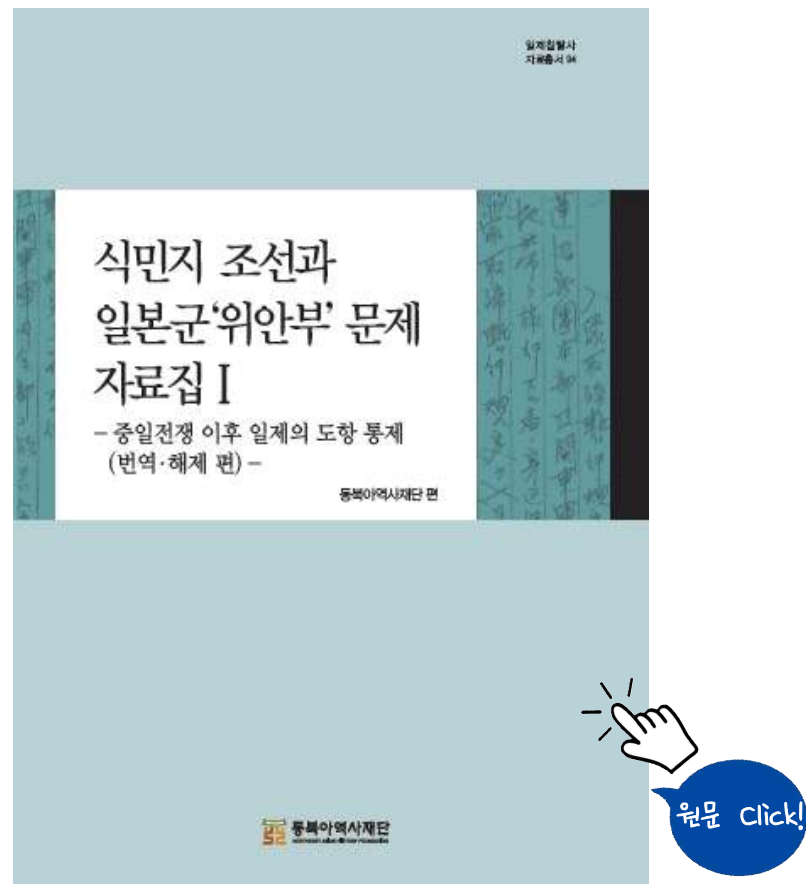


전쟁범죄·일본군‘위안부’ 피해실태 자료집

중국 침략 일본전범 자필진술서(2)

동북아역사재단 편 | 158쪽 | 20,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58-2

이 자료집은 『전쟁범죄, 일본군‘위안부’ 피해실태 자료집-중국 침략 일본전범 자필진술서』의 후속 작업으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남긴 전범 4명의 자필진술서를 번역한 것이다. 이들 진술서는 일본군이 전쟁터에서 여성들을 폭력적으로 납치하고, 민간의 가옥을 몰수해 군 위안소로 사용한 사실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성을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삼아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지역의 여성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위안부’의 실체와 피해 양상을 규명하고, 전시 성폭력과 전쟁범죄의 책임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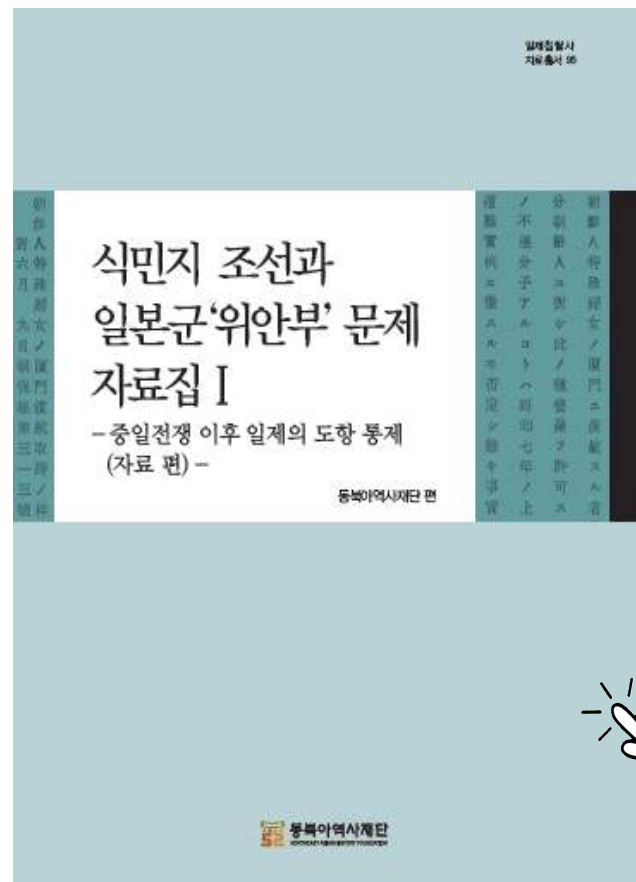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I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항 통제(번역·해제 편)

동북아역사재단 편 | 469쪽 | 24,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91-2

이 자료집은 조선총독부 관계 문서를 중심으로, 사회사적 차원에서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신문기사와 일제의 도항 사무를 담당했던 외무성 아메리카 제3과 자료를 함께 번역·해제한 것이다. 더불어 '위안부'의 동원과 이송에 직접 관계된 일본 정부와 군의 공문서도 함께 다루었다. 수록된 자료들은 식민지 조선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이송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위안부' 동원·이송 정책에 내재한 식민지성과 그 작동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지배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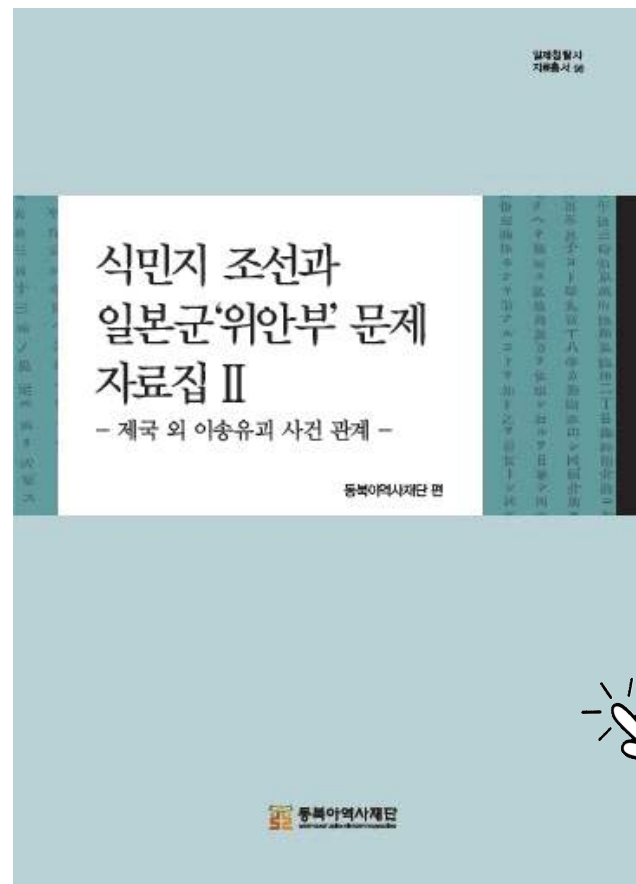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I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항 통제(자료 편)

동북아역사재단 편 | 600쪽 | 24,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90-5

이 자료집은 1939~1940년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의 정책이 식민지 통치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등외사월보』와 『경무회보』의 관련 기사를 수록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관계 자료로 새롭게 분류·정리한 자료들의 원문도 함께 소개했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통치와 전시 동원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조명하는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데 필요한 학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II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편 | 450쪽 | 24,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89-6

이 자료집은 일본의 영역을 넘어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담은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련 형사 판결문과 당시 사법 당국이 ‘위안부’ 이송을 불법으로 인식하고 처벌한 사례를 수록한 것이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지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통해 식민주의와 조선인 ‘위안부’ 피해 문제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일 뿐 아니라, 식민지 지배 구조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밝히고,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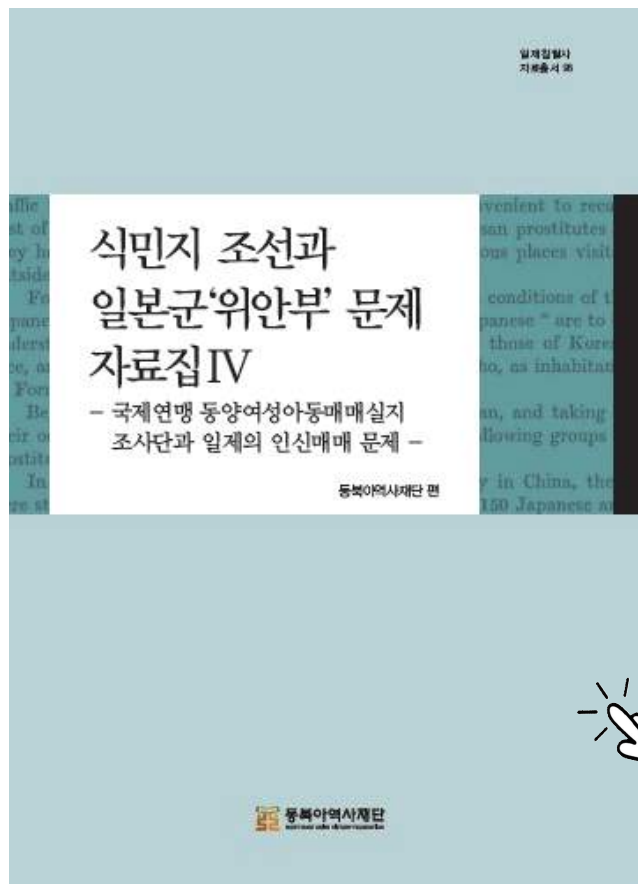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III

전시체제기 유엔비어 통제 관계

동북아역사재단 편 | 456쪽 | 24,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90-2

이 자료집은 식민 권력의 전시체제기 방침에 의해, 또는 속임수로 전쟁터에 보내져 병사의 '성적 위안'이나 그 밖의 전쟁 도구로 이용된 여성들의 피해를 다룬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 사실을 발설했다가 당국에 의해 불온언동으로 처벌받은 전시체제기 '유엔비어죄' 관련 자료와 일본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건을 언급했다가 처벌된 사례를 수록했다. 수록된 자료들은 전시체제기 식민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전시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은폐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공식 기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된 피해의 목소리를 통해 당시 조선 사회에 남아 있던 기억과 증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실상과 전시 성폭력의 구조를 이해하고, 과거의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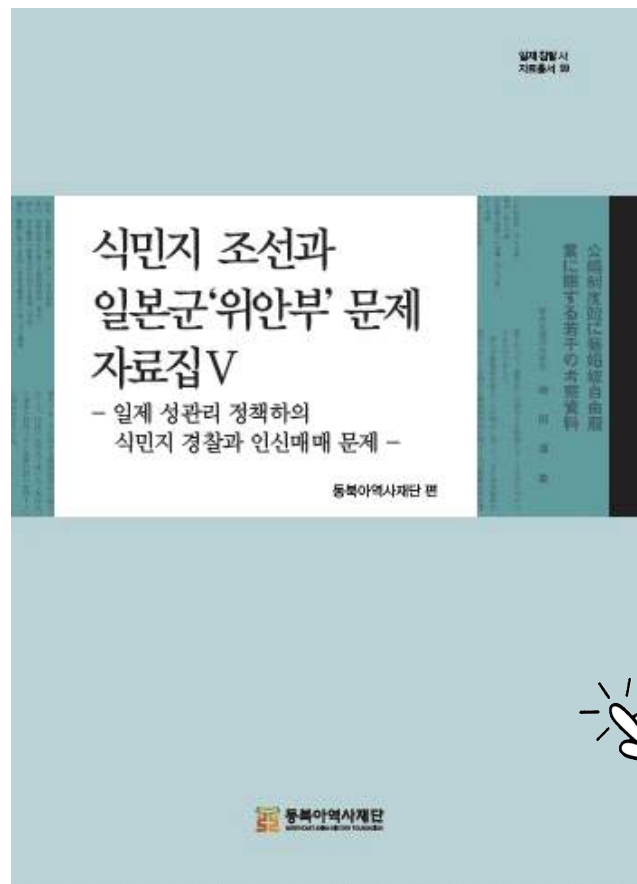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IV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실지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 678쪽 | 30,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75-6

이 자료집은 1930년대 초반 국제적 시각에서 일본 성관리 정책의 실태와 성격을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제연맹 여성·아동 매매 실지 조사단의 조사 내용과 보고서,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관련 자료를 수록했다. 수록된 자료들은 일본의 성관리 정책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도 국가적 관리와 은폐의 방식으로 유지·변형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운용하면서 '공인과 은폐'의 속성을 지닌 국가관리 성동원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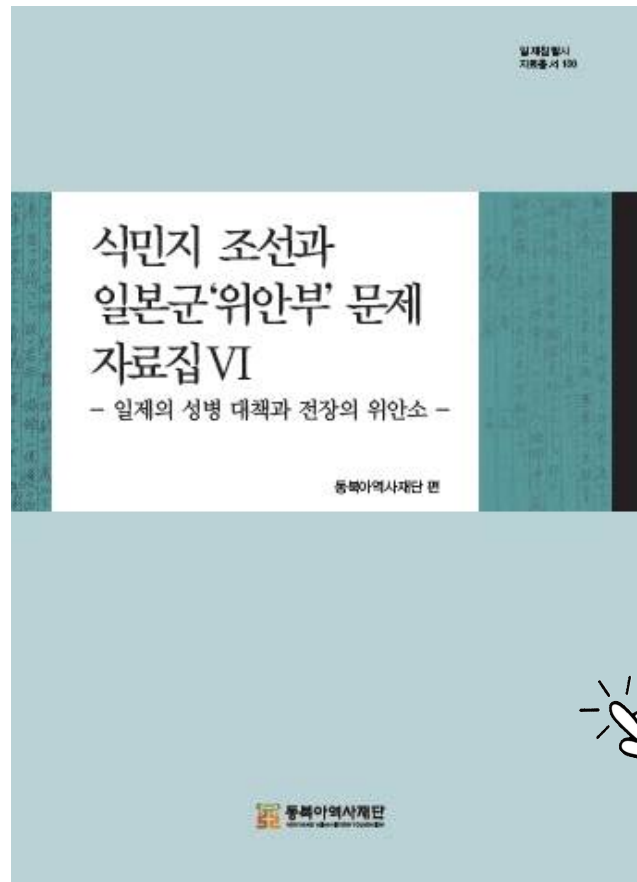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V

일제 성관리 정책하의 식민지 경찰과 인신매매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 704쪽 | 40,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46-4

이 자료집은 일본의 조선 침탈과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조선에 제도화된 공장·사창제 문제를 중심으로, 식민지 경찰과 인신매매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경찰령으로 제도화된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단속 주체였던 경찰이 어떠한 인식과 실무를 바탕으로 식민지 성관리와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했는지를 보여준다. 수록된 자료들은 식민지 조선의 성관리 제도가 법령과 경찰 행정을 통해 관리되면서도, 그 안에서 인신매매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동했음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 메커니즘이 구축된 양상과 중일전쟁 이후 조직화·체계화된 '위안부' 모집에 어떠한 '식민지적 조건'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형성 배경을 식민지 성관리 정책과 인신매매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VI

일제의 성병 대책과 전장의 위안소

동북아역사재단 편 | 586쪽 | 35,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72-0

이 자료집은 식민지 조선의 성병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성병 인식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근대 일본의 성관리 정책을 조망한 것이다. 또한 합법과 비합법의 구분을 넘어, 제국 일본의 일관된 '성적 위안'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성병 관련 신문보도 자료와 피해자 구술자료집을 통해 성병 관리 피해자의 경험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수록된 자료들은 성병 관리가 단순한 보건 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고 전쟁 수행을 뒷받침한 성관리 체계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성병 관리'라는 측면에서 위안소의 출현 배경과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집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형성과 작동 방식을 성관리 정책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